자본주의에 맞서 대안세계로!

2019 노동운동 포럼

일시 **10월 12일(토) 11:30~18:40**

장소 **경희대학교 경영관 213호**

주최 **사 회 진 보 연 대**

참가비(자료집 포함)는 1만 원 입니다. 접수처에 납부해주세요.

프로그램 Program

11:30~12:00	**접수**
12:00~12:10	**개막식**
12:10~13:50	**[강연] 오늘날의 사회주의** - 연사: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14:00~16:10	**[토론] 격동하는 동아시아, 어디로 향하는가?** - 사회: 이유미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 발제: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 - 토론: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
16:25~18:40	**[토론]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자운동 평가와 반성** - 사회: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장 - 발제: 김동근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 토론: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서보람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 장석원	금속노조 기획부장

목차

강연	[강연] 오늘날의 사회주의 …·	8
	[발제] 격동하는 동아시아, 어디로 향하는가? …·	30
토론	[토론1]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	50
	[토론2]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 …·	54
	[발제]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노동자운동 평가와 반성 …·	56
토론	[토론1]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	81
	[토론2] 서보람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 …·	98
	[토론3] 장석원	금속노조 기획부장 …·	104

2019 노동운동 포럼

[강연]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연]

오늘날의 사회주의

한지원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1. 취지

이 강연의 목적은 21세기에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사회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내걸고 집권에 성공한 남미와 유럽의 정치 세력들, 자본주의 본고장인 미국과 영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자칭 사회주의자 스타 정치인들, 4차 산업혁명이 사회주의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이라 주장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대다수 노동자가 기본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현장 중심의 전투적 임금·고용 투쟁과 국유화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 노동운동의 현장파 활동가들 등등. 이런 최근 유행하거나 주변에서 곧잘 보는 사회주의 조류들을 이 강연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청중 중 일부는 “사회주의적 대안을 말해줄지 알았는데, 또 뭔가를 비판만 한다는 거야?”라고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사회주의가 최근 인기를 끄는 이유가 기존 정치 세력들이 이 난세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덕분인데요.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대안’이 아니라 또, 심지어 대안을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한다는 것이 적당한지, 당연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사례로 말한 사회주의들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배계급이 주장하는 개선책들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포퓰리즘을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결과적으로 “투쟁하는 두 계급의 공멸”로 세상을 이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비판은 당연히 대안을 내포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에서 포퓰리즘으로 타락한 사회주의들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를 지양한다는 것의 의미 또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듯 포퓰리즘 정치가 세계를 정말로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비판을 통해 대안적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사회주의로 포장된 포퓰리즘 비판 역시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 사회주의는 무엇을 비판하는가?

최근 논란이 됐던 조국 법부장관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조국 씨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이면서 자유주의자입니다”라고 칭해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모두를 열 받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조국 씨가 정말 ‘내로남불’의 달인이라 할만한 담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주의는 19세기부터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탄생했고, 비록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20세기 내내 자유주의와 대결해 왔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을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이에크가 사회주의를 “노예의 길”이라고 불렀던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물론 시장사회주의처럼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해보려는 시도도 역사적으로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에 사회주의가 잡아먹혔거나, 유고슬라비아 같은 자주 관리 실험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시장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거나, 어쨌든 모두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했던 ‘정의론’의 대가, 존 롤스 같은 정치철학자는 ‘재산 소유의 민주주의’라 불리는 자본 재분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를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동유럽 개혁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국유자산 분배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이었을 뿐인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상품이 제 가치대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 협잡, 독점 같은 다양한 부등가교환 속에서 초기 자본이 평등하게 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시장경제에서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재생산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유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 국가, 종교 등의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개인의 재산, 정신,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만들자는 사상입니다. 자유란 개인이 재산, 정신, 육체를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서유럽의 혁명들 속에서 만들어지고 확장된 사상입니다.

16세기 네덜란드에서는 귀족과 상인들이 에스파냐 왕조의 가혹한 세금과 종교탄압에 맞서 세금을 내지 않고,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혁명 과정에서 경제적, 종교적 자유가 구체화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귀족과 상인들이 국왕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며 왕의 권한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의회와 입헌군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개인 사이에도 자유가 있다는 생각

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민중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 권리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왕의 목을 베고 공화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유의 수호’를 ‘재산 소유의 수호’로 여기는 부르주아들과 소유할 재산이 없었던 민중이 격돌하면서 자유의 조건으로서 경제적, 정치적 평등이 자유주의 사상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를 만든 혁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귀족들과 약삭빠르게 부를 축적한 새로운 부자들이 당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낸 집단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당연히 위기에 대처하는 리더십, 또는 새롭게 등장하는 지배계급의 경제, 사회 조직 원리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재산권을 그 중심에 뒀습니다. 자유는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권리’입니다. 존 로크는 자유주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유권은 신이 인간 개개인 모두에게 준 자연법으로 타인이나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 이 재산은 개인이 노동으로 생산한 것이다.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노동한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는 지주에 구속되어 노동하는 농노와 달리 개개인이 자신의 육체와 의식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소유권으로서 자유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소유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 즉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시장은 재산을 소유한 개인과 정신, 육체를 소유한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상품을 교환하는 자유의 실현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자유주의 혁명은 시장을 재생산하는 경제 제도의 혁명을 동반했습니다. 네덜란드 독립혁명 뒤에는 상품시장을 비약적으로 확장한 상업·무역 혁명이, 잉글랜드 명예혁명 뒤에는 오늘날의 국가재정과 중앙은행권 원형이 만들어지는 재정혁명, 화폐 혁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보편적 지향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19세기 중반 당대 자유주의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조금 길지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유! 왜냐하면 상품 교환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오로지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자유롭고 대등한 인간으로서 계약을 맺는다. 계약은 이들의 의지가 공통된 법률적 표현으로 드러난 최종 결과물이다. 평등! 왜냐하면 이들은 오로지 상품소유자로서만 서로 관계하며 등가물을 서로 교환하기 때문이다. 소유! 왜냐하면 이들 각자는 모두 자신의 것만을 처분하기 때문이다. 벤담! 왜냐하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하나의 관계로 묶어주는 유일한 힘은 그들 자신의 이익이 발휘하는 힘이다.” 참고로 벤담은 공리주의를 표현합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자유, 평등, 소유, 벤담의 결과로 자본가가 잉여노동을 배타적으로 취득하는 자본주의가 재생산된다고 설명합니다. 잉여노동이란 생산에 소모된 모든 생산요소를 복구하고도 남는 노동을 말합니다. 보통 이윤이라고 표현

되는 것이지요.

자유주의는 결국 상품의 자유와 평등입니다. 노동자 역시 노동력 상품으로서 시장에 참가하는 것으로 이런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됩니다. 한 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의지로 직장에 갑니다. 출근 안 한다고 경찰이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노동력 상품으로 사용자의 지휘를 따릅니다. 자본에 구속됩니다. 노동력 상품을 자본가에게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자유인을 선언했다가는 … 바로 반품당하겠죠. 고상하게 말하면 해고되는 것입니다. 노동력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임금소득을 얻습니다. 그 소득으로 직장에서 나오면 소비를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 상품을 소비하는 자유인입니다. 내가 가진 1원과 남이 가진 1원이 완벽하게 같은 평등한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소비의 원천인 소득을 얻으려면 우리는 다시 노동력 상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소득도 없습니다. 욕구를 충족할 소비도 없고, 심지어 남들로부터 사회의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 대우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시장의 자유인을 실은 임금 노예라고 비꼬았습니다.

마르크스가 자유주의의 모순으로 주목한 것은 자본주의적 소유제도였습니다. 자본주의 소유제도는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생산물을 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노동력의 소유자는 생산물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본가가 노동력 상품의 가격으로 내주는 임금을 얻을 뿐이죠. 그래서 자본가는 생산물 소유자로서 최종책임자 역할을 가지며, 책임자로서 노동과정을 통제할 권리도 가집니다. 자본가는 노동과정을 통제해 노동력이라는 잠재적 노동 공급자에게서 노동을 최대한 뽑아냅니다.

노동을 추출하는 데는 해고가 중요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해고라는 칼을 노동자의 목에 들이대며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자본가의 가장 중요한 노동 통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보상을 시간급, 성과급 형태로 노동시간이나 성과에 연계하는 것입니다. 더 벌고 싶으면 알아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작업 현장을 군사적 위계로 통제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고도의 분업체계인 기업에서는 무임승차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업조직의 원형은 군대입니다. 현대 기업의 시조라 할 수 있는 것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인데요. 동인도회사는 군대와 같았습니다. 인도에서 전쟁도 했죠.

최근 ‘직장 갑질’이란 말도 유행하는데요. 사실 자본주의 노동과정 핵심이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입니다. 갑질 없는 직장에서는 노동력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노동력 상품의 합리적 선택은 덜 일 하고, 더 받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를 ‘소외’라고 표현했는데요. 노동자가 생산물과 생산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사람이 소외된 경제에서는 자유가 아니라 ‘당근과 채찍’이라는 동물의 원리가 지

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갑질'에 저항하는 운동을 일상적으로 조직합니다. 예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임금인상과 함께 작업장의 군대식 갑질에도 저항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갑질 근절을 내세운 운동도 활발한데요. 하지만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서 갑질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매우 강한 사업장에서 간혹 노동자 현장 권력이 관리자들을 압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노동해방 공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아름다운 결과보다는 결과적으로 생산성 하락으로 기업 경영이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외된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생산을 조직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자본주의적 소유제도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경제를 특정 계급이 지배하도록 만듭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바꾸면 자유주의의 내적 모순을 지양할 수 있습니다. 생산수단은 사회적 이익, 즉 모두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유에서는 상품경제도 지양됩니다. 생산수단 소유자의 사적 이익이 없다면 상품을 매매하는 시장도 존재 이유가 점차 사라집니다. 마르크스는 1848년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계급 대립이 있었던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연합체"를 건설하자, 그러려면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이 더 발전한 형태를 띠고 있든 덜 발전한 형태를 띠고 있던 소유 문제를 운동의 기본 문제로 내세운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주의의 핵심 목표는 계급 없는 경제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계급 사회의 경제는 지배계급이 잉여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조직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제한합니다. 사회가 누리는 풍요는 부수적 결과이며, 그래서 지배계급이 착취하는 잉여노동이 감소하면 경제가 위기에 빠집니다. 계급 없는 사회는 잉여노동을 추출하되 그것을 사회 전체가 함께 취득하고 처분합니다. 자유와 평등은 경제에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또한 사적 이해에 따라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생산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3. 실패한 소련 국가자본주의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줄여서 소련은 실제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실험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둘째는 국유화 계획경제였습니다. 이 두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온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요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해 말해보죠.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계급투쟁의 필연적 통과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현대의 민족국가는 자본주의를 재생산하는 제도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제를 변화시키려면, 현존 국가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르주아의 낡은 제도들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괴와 건설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을 일부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행위자들의 관습까지 모두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자본주의적 제도와 관습을 일관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라 부르는 권력 구성 방식은 기존의 지배계급에 유리합니다.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지배적 사상과 경제적 관계가 지배계급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자유주의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강요하는 사상이 아니라 피지배계급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런 조건이 언제든 부르주아가 권력을 장악할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사실상 부르주아 독재의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장기간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 소수의 독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수의 지배이자,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입니다. 이 독재는 기존 지배계급에 대한 억압을 동반합니다. 마르크스는 1848년, 1871년 혁명 이후 지배계급의 반혁명과 무자비한 살육을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1917년 10월 혁명 이후 4년 넘게 반혁명 세력이 끔찍한 내전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내전으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과거 지배계급의 내전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힘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이론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개념을 현실에서 구현할 때는 난제가 존재합니다.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누가 어떻게 대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상시적인 직접 민주주의는 답일 수 없습니다. 부르주아의 관습은 소수의 비뚤어진 나쁜 관습이 아닙니다. 다수의 관습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가 필요합니다. 러시아혁명의 주역이었던 볼셰비키는 자신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수탁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볼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부르주아 잔재가 남아있는 한 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정신의 독재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현실의 혁명에서 당의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독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1930년대 말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소련 공산당의 독재는 사회주의 건설을 선언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일국에서 혁명을 완수했다면 이제는 미국이란 외부의 잠재적 위협이 문제가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방어해야 합니다. 당은 외부의 자본주의적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는 주체가 됩니다. 당의 독재는 이렇게 영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유화 계획경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모든 기업을 국가가 소유한 후,

시장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자원 배분과 생산물 분배를 시행하면, 자본주의를 지양할 수 있다는 발상인데요. 이런 생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화 계획경제는 자유시장 못지않게 내적 모순이 큽니다.

국유 경제에서는 국가와 일체가 된 당이 잉여노동을 취득합니다. 국유화되고 집단화된 소련 경제의 공산당은 국가 단일기업의 소유주와 같습니다. 잉여노동을 추출하는 방법, 잉여노동의 취득과 처분 모두를 당이 결정합니다. 원래 의미의 사회적 소유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잉여노동을 창출하고, 취득하고, 처분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에서 노동조합은 물론이거니와 공장평의회 같은 조직도 모두 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만이 경제적 주체가 되는데요.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만이 진정한 경제적 주체이듯, 소련에서는 공산당만이 유일한 경제적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은 집합적 부르주아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국가로 통합된 계급이 지배하는 산업 경제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유화를 중심에 두는 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국가자본주의는 용어에서도 나타나지만, 특수한 성격의 자본주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동일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계급이 잉여노동을 충분하게 취득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이윤율 위기 말입니다. 소련은 실제로 1970년대 이윤율이 급락하며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소련은 국유화와 동시에 완전고용을 목표로 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차이는 고용주의 성격 차이일 뿐인데요. 사회주의 고용주가 갖는 차별성은 완전고용을 실제로 달성한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회주의인데 실업이 만연해 있다면 아무래도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소련은 완전고용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유 기업에 노동을 소모하는 기술혁신과 자본축적을 강제합니다. 그리고 1960년 말 즈음 소련은 실제로 실업률 제로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경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완전고용 이후부터는 인구증가와 노동생산성 상승에 비례해서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련은 이즈음 인구절벽에 상태에 근접합니다. 또한 노동 소모적 기술진보를 계속해온 소련은 노동을 절약하는 기술, 즉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소련 지도부는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데요. 투자 증가와 생산성 하락은 이윤율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80년대 레이건이 공산주의 타도를 내걸고 신냉전을 일으키자 소련은 가장 비생산적인 투자라 할 군사 투자까지 늘려야 했습니다. 결국 1980년대 말 경제 붕괴 속에서 우왕좌왕 개혁을 추진하다 1989년 동유럽이 무너졌고, 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국가자본주의는 미국 법인기업 자본주의보다 열등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은 경제 위기가 발생해도 산업예비군을 늘리고 부실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

니다. 시장을 통해 경제 위기의 비용을 피지배계급에 전가하면서 지배계급이 이윤율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이후 성장이 재개되면 희생의 비용을 일부 복구합니다. 하지만 완전고용과 계획경제의 국가자본주의는 위기의 손실 비용을 국가가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계획 당국이 위기를 인정하면 계획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반대로 당국이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체계적인 위기관리와 복구는 계획 당국의 능력이나 권위와 충돌합니다. 소련식 국가자본주의는 지배계급이 위기에 대응할 마땅한 경제적 수단이 없습니다. 정치적 수단만 있죠. 요컨대 소련은 자본주의가 아닌 것도 아닌데, 미국만큼 위기관리에 유능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의 독재와 국유화로 특징지어지는 소련 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런 소련 사회주의의 실패를 반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 혁신된 소련?

사회변혁노동자정당(변혁당)이란 단체는 얼마 전 “사회주의의 대중화”를 결의했다고 하는데요. 대중화는 자신들의 정당을 국가에 등록하고,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사회주의를 내건 후보를 내겠다는 의미랍니다. 그런데 그 대중화하겠다는 사회주의는 도대체 뭘까요? 사실 사회주의자들이 백 년 이상 곤란했던 것은 대중화의 방법이 없어서라기보단 자유주의 비판으로서 사회주의를 재건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변혁당이 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과 민주적 계획경제입니다. 노동자 권력은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제입니다. 민주적 계획경제는 그런 노동자 권력이 재벌, 핵심 기간산업, 은행 등을 사회화한 뒤 경영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소 온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국유화 계획경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 번 볼까요.

먼저 노동자 권력은 당연히 오랜 기간 다른 계급의 집권을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서 노동자가 경영하겠다는 것을 부르주아에게 부탁해서 이룰 수는 없겠지요. 또한 나라 경제 변혁하는 것이 대통령 임기 5년 만에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변혁은커녕 선거법 하나 개정하는 것도 한 정권의 임기 내에 못 하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사실 변혁당이 주장하는 모든 정책은 위헌일 것입니다. 노동자 권력은 경제적, 사법적, 행정적 권력들의 반격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

력하고 장기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권력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라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다른 말은 아닐 것인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노동자 권력은 당의 독재로 귀결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소련이란 비극을 의식한 탓인지 변혁당은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많은 대표와 관료들을 직접 선출하고 소환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협동조합 같은 자주적 조직들의 의견이 최고 의사 결정에도 상시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서유럽식 민주주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유럽에서는 의회가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선거, 정당 체계가 발달해 있습니다. 코포라티즘이라 불리는 이해관계자 조정 기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변혁당은 정치적 다원주의나 계급적 타협을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런 것인데요. 아래로부터의 자유로운 의견이 존중되지만, 그것이 이미 설정된 사회주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주의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절대 과학과 절대 이념의 담지자로서 전위당을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동자 권력이 논리적 필연으로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두 번째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국유화 계획경제입니다.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려면 그만한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로부터’든 '위로부터'든 다양한 참여는 최종적으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권력과 계획경제는 동전의 양면일 뿐입니다. 참고로 변혁당은 국유화와 함께 사회화란 말도 사용하는데요. 사회화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생산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적, 정신적 생산수단들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면서 사회적 생산과 분배를 개인과 사회가 충돌하지 않고 해내는 형태”를 말합니다. 사회화는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주의 경제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계획경제에서는 그 형태가 국유화가 됩니다. 계획의 주체가 국가고, 계획이 집행되려면 소유 역시 국가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국유화 계획경제는 경제성장의 기본적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현대경제학을 정리한 폴 새뮤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란 희소성 조건에서 최대화 문제를 푸는 것이다.” 희소한 것은 자원이고, 최대화할 것은 효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풀이 방법은 경쟁 시장에서 수요공급 균형 가격을 찾는 것입니다. 이 균형가격은 희소성과 효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희소하고 효용이 높으면 가격이 매우 높고, 효용은 높지만, 희소성이 덜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다면 계획경제에서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변혁당이 주장하는 민주적인 계획경제라면, 수요와 필요자원에 대한 정보를 자치조직들에서 매번 어마어마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야겠죠. 그리고 국가 관료가

수천만 개 상품에 대한 수요와 생산에 필요한 자원 모두를 파악한 후 이것들을 최적화해서 생산할 수 있는 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슈퍼컴퓨터와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런 방정식을 풀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중국의 신흥자본가인 알리바바 회장 마윈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생산력 발전에 따라 인간 욕구가 복잡해지고 사회적 분업이 고도화되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필요자원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런데 계획경제가 전제하는 전국적 전산업적 자원 최적화 방정식은 미시적 변화가 많아질수록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인데요. 상품경제에서는 제각각인 개별적 노동을 상품실현을 통해 보편적인 사회적 노동으로 수량화합니다. 홍길동의 개별 노동은 그가 생산에 참여한 상품이 가격 1원에 판매되어야 1원의 사회적 등가를 가진 노동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경제에서는 상품매매 시장이 없기 때문에 개별 노동을 사회적 교환이 가능한 보편적 노동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적 기준을 임의로 정해야 합니다. 보통 노동시간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물리적인 한 시간의 일은 자본집약도에 따라, 노동자의 숙련에 따라 다른 노동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계로 측정하는 물리적 노동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고강도 숙련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노동을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본 집약적이고 숙련이 필요한 곳에 오히려 자원이 덜 배분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덜 배우고 덜 힘든 일을 찾아 움직이고, 생산 책임자는 그런 노동자를 양적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자원을 배분합니다. 저생산성-저숙련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소련에서 발생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슈퍼컴퓨터와 디지털네트워크로 최적화된 자원 배분을 계산하더라도 풀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변혁당의 비전인 노동자 권력과 민주적 계획경제는 그것에 어떤 수식어들을 가져다 붙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련 사회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소련의 실패를 스탈린의 오류라든지, 관료적 경직성이라든지, 미국 탓이라든지, 여러 상황 탓으로 평가하면서 21세기에 이와 비슷한 사회주의를 반복하는 것은 비단 저 단체만은 아닙니다. 노동자연대를 비롯해 자칭 사회주의 조직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단체가 비슷한 오류를 반복합니다. 1990년대 소련 몰락 이후 한국 노동자 운동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가 청산과 변절, 아니면 변명으로 그친 나쁜 결과입니다.

5. 사회주의로 포장한 노동자주의

여기 계신 청중들은 “뭐 사회주의가 대중적 쟁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세상사에 크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진지하지 못한 평가들은 현실의 노동운동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회주의의 생명력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비판에 있는데요. 당-국유화 노선을 반복하는 사회주의는 앞서 본 것처럼 현대적 혁신을 거친 자유주의를 제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 능력을 상실한 사회주의에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도그마만 강조됩니다. 바로 노동자 계급이 도덕적으로 위대하다는 노동자주의 도그마입니다.

노동자주의는 노동자 운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만들고 그런 이기주의를 정당화합니다. 당-국유화 모델은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냉정한 사실을 적당히 뭉개다 보니, 대안 사회에 친화적인 제도와 사상도 상대화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실의 운동이 무엇인지도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사회주의 운동에서 남는 것은 임금소득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면 자본주의가 폐지되고 사회주의가 달성된다는 도그마뿐입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노동자계급의 지배는 계급 철폐로 이어지니, 노동자의 자기 이익은 숭고하다는 식인데요.

한국에서 노동운동의 현장파, 또는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지는 노동운동 세력들은 항상 임금을 극대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올해 여름 사회진보연대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1만 원을 비판한 것을 두고도 이들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다음은 노동해방투쟁연대라는 단체의 주장입니다. “노동조합은 투쟁력이 뒷받침되는 이상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 요구안을 내걸고 가차 없이 투쟁해야 하고, 그 투쟁력에 조응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을 쟁취해야 한다. 노동조합 임금투쟁은 자본가 이윤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되찾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대담하게 수행해야 한다.”

정말 그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 노동자가 집단으로 이기적으로 되면, 집단적 이익이 실현되는가? 둘째, 과연 저런 투쟁들이 사회주의적 지향과 친화적일 수 있는가?

우선, 저런 식의 임금인상 극대화는 노동자 단결이 아니라 분열과 격차를 촉진합니다. 자본주의는 임금과 이윤에 관한 법칙이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란 개별 행위자들이 넘어설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죠. 임금 극대화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처럼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되는 곳에서 이뤄지는데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그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비용 전가의 방식으로 대응했던 역사가 바로 1990년대 이래 한국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만들어졌고요. 대기업 노조가 할 수 있는 만큼 임금 올렸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 현대차 연봉 수준으로 자동차산업 노동자가 모두 임금을 인상하면 어떨까요? 이윤은

고사하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자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냥 모두 망하는 거죠.

공공부문 역시 임금 상승에 외주화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후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참고로 한국 공공부문은 임금이 OECD에서 최상위, 일자리 숫자는 OECD에서 최하위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가파른 연공급 임금 커브 속에서, 공공부문 노조가 1990년대 이래 임금인상을 지속해서 추진해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커지다 보니 현재 온 나라 청년들이 공공부문 입사를 두고 경쟁합니다. 정규직화를 두고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등을 벌입니다. 취업 시장만 놓고 보면 조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조선 시대는 취업이 과거급제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 하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과연 노동해방에 가까워진 모습인가요?

만약 어찌어찌해서 노동자 전체가 임금 극대화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노동생산성 향상 이상으로 총임금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인상이 상쇄되거나, 무역적자와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합니다. 1970년대 영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투적 경제주의의 극한치를 보여준 영국노총은 외환위기 와중에도 임금인상 파업을 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노동자들이 그다음 선택한 것은 혁명이 아니라 마거릿 대처의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요컨대, 임금 극대화는 시장의 반격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지속 가능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든 임금 극대화로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국가권력을 잡았다고 상상해봅시다.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이고,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유토피아보단 디스토피아에 가까울 겁니다.

첫째, 우선 그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잉여노동을 어떻게든 축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부터 불가능합니다. 노동자가 임금으로 잉여노동 전체를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공장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려면, 매번 그만큼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삭감해야 할 겁니다. 그 사회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지양되어야 할 테니 소득이 높은 노동자부터 임금을 삭감해야겠죠. 그런데 임금 극대화가 지상과제이자 당연한 권리가 된 노동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파업해야죠. 그렇다면 정부는 진압해야 할까요?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사회주의 사회이니 양보하라고 요구하면 될까요?

경제개발이 급했던 소련은 잉여노동을 최대한 중화학공업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임금을 억제하며 노동조합을 억압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반동분자로 규정해 숙청했죠. 2000년대 남미의 좌파정부들도 비슷한 곤경에 처했습니다. 예로 브라질 룰라는 집권 후 매우 불평등했던 사회보장제도를 바꾸려 했는

데, 이때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이 바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었습니다. 사회보장 개혁 중 하나가 연금이었는데요. 민간의 퇴직연금이 1천 불로 제한되어 있던데 반해 공공부문은 아예 상한액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평준화하려 하자 공공 노조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었죠. 아마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저들처럼 노동자의 이득이 무조건 숭고하다고 말한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둘째, 사회를 새롭게 조직하려면 노동자 다수가 사회와 기술에 관한 지식을 쌓아야 하고,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윤리를 체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능력이 없으면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요. 당의 선한 의지나 민주적 의견수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지식과 윤리의 문제인데요. 우선 내 임금부터 올리자는 노동조합들이 과연 이런 지식과 윤리를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현재도 임금인상에는 매우 능하지만, 경영참가나 숙련향상 같은 사회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에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늘어나고, 지식과 노하우를 쌓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처럼 고강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던 때야, 당연히 노동조건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까지 이런 운동에만 몰두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노동자주의로 퇴보한 사회주의자들이 새로운 세상에 필요한 자질이 아니라 임금인상은 숭고하다는 식으로 노동조합의 편협한 경제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입니다. 사회주의를 노동자 이기주의로 퇴보시키는 것이니 말입니다. 한 번 상상해봅시다. 만약 자본의 질서가 아니라 노동의 질서가 세워졌다고 했을 때, 현재 민주노총이 기획재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노조가 현대차를 경영할 수 있을까요? 공공노조들이 평등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노동자주의, 또는 노동자의 이기주의가 사회주의로 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사회주의를 퇴보시킵니다. 사회주의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으로 선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회주의는 자본을 악마화한 후에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노동자 주도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참고로 노동자 운동의 구체적 과제는 본 행사 두 번째 토론에서 이야기됩니다.)

6. 유행하는 속류 사회주의들

패션 잡지인 GQ에 사회주의 관련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개팅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소개하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신선

하기 짝이 없는 질문에 함께 있던 영국인, 스웨덴인, 프랑스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답했다. “오히려 자본주의자라고 하면 도망갈 것 같은데?”, “공공의 이익에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 “섹시하지.” 지금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의 밀레니얼 세대에게 사회주의는 가장 쿨한 트렌드다>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 코르테즈 같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 거는 활동가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쨌든, 자본주의와 주류 정치인들이 워낙 미덥지 못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적 사회주의는 정확히 뭘까요? ‘민주적’이 소련, 중국, 북한 같은 독재국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회주의’는 참 모호합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미국민주적사회주의그룹(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에 따르면 “자원과 생산에 대한 민중적 통제, 경제계획, 공평한 분배, 페미니즘, 인종평등, 억압 없는 관계 등 인도적 사회” 등등이 그들의 지향입니다. 권위적이며 관료적으로 팽창한 국가를 지양하되, 동시에 거대한 권력을 가지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책으로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과 그린뉴딜로 불리는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친환경 투자를 제시합니다. 이 둘은 사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다 중도반단된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오바마 정부와 비교해 차별적인 것은 재원 마련 방안인데요. 이들은 부자 증세와 함께 화폐 발행을 이야기합니다. 부자 증세는 아무래도 총액이 크지 않다보니, 주로 후자를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말은 사회주의이지만, 내용은 오바마 정책에 포스트케인지안 화폐 이론을 덧붙인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는 대안보다는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도로”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정부의 자금 조달 방법이 화폐 발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MT(현대화폐이론)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정부가 그 화폐로 하고 싶은 사업을 마구 늘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화폐의 본질은 세금 지불수단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법정화폐로 받는 한, 민간은 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돈을 찍어서 국채를 갚으면 되니까요. 정부가 찍어낸 돈으로 고용을 늘리면, 신규 고용된 노동자가 그 돈으로 세금을 냅니다. 계급갈등이나 저항이 큰 세금 인상 없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등이 대규모 수량 완화 통화정책을 쓰고도 지금까지 건재하다는 것이 그들이 제시하는 실증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MMT의 결정적 오류는 화폐의 본질을 잘못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화폐는

세금을 지불하는 수단 이전에 노동의 보편적 등가물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입니다. 1원이 유통되는 이유는 그 1원이 어떤 유용한 상품에 필요한 그 만큼의 노동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 지불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그 1원만큼의 노동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1원 화폐를 발행할 때는 그 1원만큼의 자산을 더 보유하거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국가 자산이나 세금이 증가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즉 총노동의 양이 증가해야 하죠. 경제성장과 무관하게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이 표현하는 노동이 감소합니다. 1원은 예전의 0.5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MMT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민간에서 세금은 내야 하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돈을 뿌리면 그 돈으로 소비나 생산이 증가해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MMT의 결정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정부 지출로 친환경 미래 사업을 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해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예로 소련의 경우 실제 완전고용을 달성한 순간부터 위기에 빠졌습니다. 노동생산성이 향상하지 않다 보니, 자본투자가 증가해도 결국에는 감가상각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계가 먹어 치우는 노동의 양만 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노동생산성 향상 없는데 투자는 계속되면 노동력이 향상해야 공장이 돌아가는데, 인구가 늘지 않으니 인력이 없어 공장 가동률도 감소했습니다. 그린뉴딜은 이런 소련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친환경 투자는 인간만이 아니라 환경이 가져가는 효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투자보다 생산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로 풍력 발전이 같은 전기를 생산할 때 화력발전보다 생산성이 좋기는 어렵습니다. 엄청난 기술혁명이 없는 한 그린뉴딜은 오랜 기간의 생산성 하락을 감내하는 방식입니다. 더군다나 세계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인구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상태입니다. 자본투자 증가와 저성장이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런 조건에서 돈을 막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일본의 수량 완화를 실증 사례로 삼는 것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량이 몇 배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는 새로 발행된 화폐는 대부분이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으로 은행 장부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발행된 통화가 최종적으로 기업의 현금보유로 가둬져 있습니다. 돈이 발행은 됐으나, 화폐유통속도가 엄청나게 감소해 결과적으로 화폐유통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MMT가 말하는 화폐 발행을 통한 경제성장과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론대로 되려면 실제 유통되는 화폐량이 많아졌어야죠. 새로운 화폐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했어야죠.

정리하면, 민주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과학적 비판 없는 도덕적 선의일 뿐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했던 과학적 사회주의에 한참 미달하는 것은 물론, 자유주의자들의 케인스주의 관리에도 미달합니다. 실현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대안일 뿐입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디지털 경제가 크게 확대되면 자본주의가 더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주의 같은 다른 체제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스토리인데요. 논자마다 약간씩 강조점은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극대화됩니다. 여기에 생산비용이 거의 제로인 디지털 서비스가 사용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초저가 제품과 공짜 서비스가 지배적인 사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3D프린팅 기술로 제조업에서도 거대 자본이 필요치 않아집니다. 이제 각자가 취향에 따라 스스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이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화폐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개인 간 거래가 완벽하게 보증되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하는 거래수단인 법정화폐가 필요 없습니다. 자본주의 토대인 시장과 화폐가 사라지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도 매력을 잃습니다. 그리하여 협력과 공유의 경제가 열립니다. 사회주의는 최신의 기술 덕에 계급투쟁이라는 고난의 과정 없이도 쟁취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과 활동가들의 이런 테크노-유토피아는 흥미롭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한 편에서는 테크노-디스토피아도 이야기되거든요. 인공지능 로봇으로 일자리가 사라져 대량실업이 양산되고, 디지털 경제로 서비스 공급의 물리적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수 전문직과 연예인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슈퍼스타 경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테크노 디스토피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주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런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버전의 빈민 구휼 정책, 또는 실업 관리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변화와 관련된 사회주의적 전망이나 기본소득 전망에는 결정적 오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생산수단은 오직 그것들이 사적 소유로 영유될 때만 ‘자본’이 되고, 자연환경의 생산적 힘은 그것들이 계급적으로 영유될 때야 ‘토지’가 되며, 노동은 우리가 노예노동, 자유 임금노동, 아니면 자유로운 연합생산자들의 노동이냐에 따라 다른 맥락이 된다.” 기술이나 자원의 사회적 성격은 어떤 사회적 관계 위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술 낙관론은 기술 자체의 성격만 주목하지 그것이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성장하거나 제한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적 관계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기본적으로 자본재입

니다. 자본주의적 관계에서 디지털 서비스들은 새로운 지대의 수단이 됩니다. 로봇, 3D프린팅, 디지털 등의 최근 기술혁신들이 실제 산업혁명이라 불리려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서 이윤율을 상승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투자를 하는 경제적 관계이니 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산업혁명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노동생산성의 장기간에 걸친 비약적 향상입니다. 노동을 절약하면서 자본도 절약하는 기술혁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잉여노동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축적과 소비의 풍요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찬란한 20세기 초중반이 바로 전형적인 사례였죠. 지난 2000년간의 경제성장을 보면, 90%의 성장이 이 짧은 100년 사이 이뤄집니다. 둘째는 수요의 비약적 증가입니다. 노동생산성이 상승한다는 것은 1인당 상품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상품은 판매되어야 합니다. 상품경제의 생산성은 투자와 소비를 가능케 하는 제도를 동반해야 비로써 진짜 생산성이 되는 겁니다. 19세기에는 생산성을 실현하기 위해 서유럽이 식민지를 늘리는 제국주의 영토팽창을 했죠. 20세기에는 법인기업 제도, 케인스주의 국가정책으로 대규모 자본투자와 대량소비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생산성과 수요의 비약적 도약이 있어야 이윤율도 장기간에 걸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없어도 이윤율은 상승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의 기술혁신들은 이 두 조건을 만족할까요? 4차 산업혁명으로도 불리는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정보통신 혁명으로 불렸죠. 하지만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런 기술로 인해 어마어마하게 노동생산성 향상되었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약간 상승은 했죠. 하지만 농업경제를 산업경제로 바꾼 19세기의 기계제대공업이나, 산업경제를 대량생산-대량소비로 업그레이드한 20세기 포드주의 혁명 같은 장기간에 걸친 노동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은 없었습니다. 경제성장률로 봐도 기술발전을 주도한 미국의 고도성장 역시 없었는데요. 민간소비나 투자도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도적 혁명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2010년대 수량 완화로 불리는 중앙은행의 팽창이 있었을 뿐이죠. 현재의 무역전쟁을 보면 최근에는 혁신보다는 퇴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윤율 운동은 당연히 2004년 이후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 1970년대부터 추세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따라서 기술변화는 계속되겠지만 기술로 인한 변화보다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사회 혼란이 오히려 중요할 것입니다. 유토피아는 공상 소설이고, 디스토피아도 기술변화가 아니라 공황으로 인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 감소와 실업증가, 과잉자본의 금융화로 인한 투기와 혼란 같은 자본주의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테크노 유토피아나 기본소득 같은 대안들은 대중의 기술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정

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 구조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전혀 비판하지 못하죠. 특히 기본소득의 경우 실리콘밸리의 우파와 사회주의 친화적인 좌파가 똑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구조는 젖혀두고 지배계급의 모순도 건드리지 않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객관적인 제약, 즉 경제 사회 구조를 분석하지 않고 대중의 정념에 호소해서 개혁을 추진하다 참혹한 실패를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와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입니다.

차베스 정부는 남미의 반미 경제공동체와 빈민 복지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차베스에 대해 21세기 사회주의 모델이라고 환호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늘날 보고 있듯이 경제와 사회의 처참한 붕괴인데요. 차베스와 그의 후예들은 구호는 요란했지만, 사회주의 건설의 실체적 문제들을 고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레닌은 10월 혁명 이후 제국주의 타도를 위해 유럽에 진출했던 것이 아니라 유럽 제국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신경제정책으로 노농 동맹을 유지하고 농촌의 잉여노동을 산업화로 이어가기 위해 온갖 타협과 내부 제도 정비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유럽 노동자 조직들에 배신자라는 욕까지 먹으며 독일과 강화조약도 맺었죠. 러시아 경제의 재건과 선진화,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의 관습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재건과 삶의 변화는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잉여노동을 늘려야 하고, 낡은 부르주아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창조해야 합니다. 소련은 결국 이 과정을 부정적 전체주의로 해결해버렸는데요. 차베스의 경우는 역으로 이 어려움을 구호로 해소하려 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변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기본 동력은 2000년대의 금융 세계화와 석유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당시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도 금융 세계화의 자본수출과 자원 가격 상승 덕에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차베스는 이 정세적 지대를 빈민 구제와 자신의 반미 공동체라는 공허한 구상에 사용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다른 산업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석유 부분에 있어서조차 외국자본에 기술과 자본축적을 의존했었습니다. 이는 차베스 시기에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해보자면 소련은 1930~40년대를 버티기 위해 농민 복지가 아니라 농민의 잉여노동 수탈을 선택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제국주의 국가들에 경제를 의존하지 않으려면, 내부에서 엄청난 저축을 만들어야 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좀 더 나은 선택이 있었겠지만, 이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차베스와 그 후예들은 저축이 아니라 분배만 반복했습니다. 인기를 위해서죠. 미국 주도의 금융 세계화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로 금융 세계화에서 벗

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망한 겁니다.
그리스 시리자는 긴축반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리자에 열광한 좌파 활동가들이 꽤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시리자가 독일의 요구대로 긴축과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경제 재건에도 성공적이지 못해 2018년 그리스 GDP는 2008년보다 40%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 유로존에서 금융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였습니다. 2002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 이상이었고, 강한 유로화 덕분에 달러로 평가한 GDP는 자그마치 두 배나 커졌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에 기대 정부 재정지출도 커졌는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구조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단 3년 만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0%에서 170%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국가 부도가 났는데요.
채권국이었던 독일은 그리스에 긴축을 통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도 조정했는데, 정작 그리스는 생산성도 낮으면서 독일의 돈으로 복지 잔치를 하고 있었던 셈이었죠. 물론 유로 체제 자체가 독일에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보다 생산성이 낮은 나라들이 통화의 평가절하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한 것이 유로체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유로에서 금융 세계화의 잔치를 선택한 것은 그리스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유로존을 빠져나오거나, 독일의 요구대로 긴축을 통해 빚을 갚거나. 시리자는 둘 다 거부했습니다. 그렉시트를 감당하려면 국민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저축을 해야 하는데요. 그건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긴축하면 당연히 저소득층과 복지 수혜를 입던 중산층 모두가 이전보다 어려워집니다. 이것도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자는 온갖 선한 것들을 말하며, 대중운동과 결합해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의로운 말들을 하더라도, 유로체제에는 흠집 하나 낼 수 없었습니다. 시리자는 독일 노동자계급에 연대를 호소할 수도 없었고, 내전을 치르겠다는 각오로 유로존 탈퇴와 노동자계급 주도의 내적 축적을 진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7. 결론: 정세적 투쟁과 대안세계의 과학으로서 사회주의

20세기 사회주의는 실패했고, 21세기 사회주의들은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에 대해 과학적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21세기 사회주의는 오히려 포퓰리즘의 한 형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관이 혼란스럽다 보니 사

회주의를 내건 운동들도 마찬가지로 혼란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의 주류가 노동자주의로 타락해버렸는데요. 자본주의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다보니 자본을 악마화하고 노동자계급이란 숭고한 영웅을 내세우는 서사입니다. 계급 버전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의 보편적 모습이 아니라 쳐부숴야 할 악마와 선택된 피해자 주체를 내세우는 것에서 노동자주의의 노동자와 포퓰리즘의 민중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보편적 모습으로 우리가 사회주의를 말할 때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째, 상품화폐 경제와 결과의 불평등을 어떻게 지양할 것인가? 균등한 기회(재분배된 자원)가 주어지더라도 공정한 경쟁(완전경쟁 시장)은 존재할 수 없고, 결국 다양한 부등가 교환 속에서 정당한 결과(최종적 자원 할당)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처럼 말하자면 결과의 불평등 원인이 바로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희소성 조건에서 최대화 문제”를 상품화폐 경제가 아닌 경제에서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계급 경제를 어떻게 지양할 것인가? 한 사회는 잉여가치를, 누가 어떻게 영유하는지, 그리고 그 그런 영유를 어떤 제도로 재생산하는지에 따라 특징이 결정됩니다. 자본주의는 이전의 봉건제와 여러 점에서 전혀 다른 체제이지만, 그런데도 한 계급이 잉여가치를 배타적으로 영유한다는 점에서 연장선에 있기도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는 계급사회를 지양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인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로서 ‘사회’를 건설하자는 이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적 소유라는 인센티브 없이도 지적, 물리적 생산력을 충분하게 축적할 수 있는지입니다. 간단한 예로 협동조합의 딜레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자본축적에 소극적인데요. 자본가들은 미래의 이윤을 위해 투자의 위험을 감당하지만, 노동자들은 ‘야성적 충동’보다 ‘현실의 안정’을 선택합니다.

셋째, 임금노동을 어떻게 지양할 것인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산수단 없는 자유인으로서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자본가는 자유인의 노동능력을 구매해, 최대한 노동을 착취·추출(extraction)합니다. 해고의 위협, 시간급, 성과급 같은 보상, 생산현장에서의 명령과 위계 등이 자본가에 의해 이뤄집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노동자의 상태를 두고 자유인으로서 임금 노예가 되는 과정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적 노동과정은 무엇일까요? 현실 사회주의는 해고라는 시장의 탄압을 숙청이라는 정치적 탄압으로 대체했습니다. 자본주의와 비슷한 보상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명령과 위계는 당에 의해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관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노동이

란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당장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인지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가능한 것들을 사회운동으로 풀어내야 하는데요. 사회주의 변혁에는 한참 미달하는 것이라도, 그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포퓰리즘으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노동자 민중을 더 끔찍한 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에 대한 투쟁과 함께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대안적 제도와 계급적 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을 새로운 통치 세력으로 훈련하는 것인데요.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조합 운동에서는 연대 임금-연대 고용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셋째, 자유주의 비판의 과학으로서 사회주의를 재건해내야 합니다. 우리 시대 사회주의는 사실상 죽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자본주의를 더 예리하게 비판하고 사회주의가 어떻게 가능한지 공부해야 합니다.
이 뒤에 있을 두 토론이 바로 이런 방향 하에서 정세적인 투쟁을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노동운동 포럼

[토론]

격동하는 동아시아, 어디로 향하는가?

[발제]

격동하는 동아시아, 어디로 향하는가?

-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

김태훈 |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

1. 들어가며

- 최근 동아시아 갈등은 예측 불가능해졌고, 경제적 보복으로 수위가 높아졌으며, 군비증강 경쟁의 수위도 질적으로 달라졌음. 2016년 트럼프 당선, 2017년 시진핑 2기 집권 이후 미중갈등은 고조되었고, 같은 시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기정사실화되며 북미 간 갈등도 심화됨. 2018년 실질적인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 시행과 동시에 중국, 북한과 협상 국면이 시작됨. 이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다시 긴밀해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하면서 미국 세계전략의 '주춧돌(cornerstone)'로서 미일동맹을 재확인하고 있음. 북중러 대 미일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것임.
- 이 상황에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세계적·지역적 갈등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며 상황이 급진전되는 듯하였으나, 2019년을 넘어가면서 상황이 교착되고 한일갈등이 격화되었음. 정세에 대한 인식과 전망,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한국 사회 내에서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음. 이 과정에서 NL·통일운동 뿐만 아니라 민중운동 전반이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에 부화뇌동하고 있음. 이러한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변혁으로서 대안세계화, 국제연대와 평화라는 관점에서 현 동아시아 정세를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이 가지는 위험성을 비판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동아시아의 정세이슈는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관심사인 미중갈등, 북미협상, 한일갈등의 배경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봄. 올해 사회진보연대가 <계간 사회진보연대>와 <사회운동포커스>를 통해 발표해 온 입장들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의 과제를 논의해보고

자 함.

2. 미중갈등의 배경과 전망

(1) 세계 금융위기와 중국의 부상

- 미중갈등은 세계정세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1970년대 이후 쇠퇴해 온 미국 헤게모니를 유지한 동력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지되는 달러의 기축통화로서 지위와 이에 협조한 동아시아의 수출 달러 환류.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선회'를 강조한 것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함.
-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안 좌파의 부재 속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했음.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상징. 또한 2000년대부터 '세계의 공장'으로서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은 2010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함.
-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의 지도자를 두고 '스트롱맨'이라는 표현이 통용되고 있음. 보통 스트롱맨은 강제력(무력)으로 지배하며 독재정치, 권위주의를 실행하는 정권을 뜻함.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한 권위주의적 지배가 일반화되고, 이는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대결구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
- 2012년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중화민족의 근대 이래로의 가장 큰 꿈이다" 고 언급. 나아가 시진핑 1인 체제를 확립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는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2050년에는 "종합국력이나 국제적 영향력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밝힘. 이것은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 구상을 의미했음. '개발도상국', '지역대국'의 지위에서 스스로를 '글로벌 강대국'으로 인식하면서,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신형대국관계)를 강조하기 시작함. 국제질서를 '학습하고 적응하는'역할에서 벗어나 '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자임. 2013년 본격화 된 일대일로 전략,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이 그 일환이었음.
- 시진핑 지도부나 중국 지식인들은 전후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기초가 된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대체하려는 의지를 보임. 그러나 현재까지 모습을 보

면, 이를 대체할 매력적 정치체제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중국식 민주주의'를 언급하지만 권위주의를 강화한다고 평가되고 있음. 중국몽은 주변국들에게 수용 가능한 선진적 민주문명질서로 비치기보다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반한, 강권적인 세계질서 구상으로 비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⑵ 미중 무역갈등의 쟁점과 전망

- 미중 갈등을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으로 평가하는 시각들이 있음.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를 주창했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문제를 풀지 않으면 두 가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첫 번째 함정은 투키디데스 함정. 새로 떠오르는 국가와 기존 헤게모니 국가가 충돌하며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 1차 세계전쟁으로 귀결된 영국과 독일의 경쟁이 대표적. 두 번째 함정은 킨들버거 함정으로 기존 헤게모니 국가가 몰락했지만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헤게모니가 등장하지 않는 것. 1930년대 대불황을 이러한 원인으로 설명함. 따라서 해법은 미중FTA를 체결하거나 TPP, FTAPP 등 다자간 협정을 통해 무역과 투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예시로 제시함.
- 그러나 버그스텐의 제안은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 시도했었던 것임. 오바마 정부는 미중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양자 차원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일차를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기존 WTO-DDA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에서 TPP를 추진.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의존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면서,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 속으로 편입되도록 유도하려는 목표였음.
-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통상 정책을 비판하면서 TPP에서 탈퇴. 그러나 이것은 보다 미국에게 유리한 협정을 맺으려는 의도이기도 했음. NAFTA, 한미FTA 등 기존 무역협정을 수정하면서 갱신함. 최근 일본과 무역협정을 맺었고, 중국과 유럽과는 분쟁 중임. 미국은 중국을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방해한다고 비판.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규범 준수 약속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함. 미국은 규칙에 따라서 중국과 '반드시 충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경쟁'을 하겠다고 밝힘.
- 미중 무역갈등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음. 첫째, 중국 대미 무역흑자 감축.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기업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것. 실제 동아시아달러환류가 바로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짐. 2013년부터 중국은 환율 조작을 중단함. 그런데 기업보조금 문제는 풀기 어려움. 수익률이 낮은 국유기업을 대량 파산시킬 수 없기 때문임. 미국은 이러한 중국 정책을 '비시장 경제'로 규정하고 반

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미 무역흑자와 관련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중국이 석유, 농산물 같은 미국 상품 수입을 늘리는 것뿐임.

- 둘째, 불공정한 기술이전 중단. 피터슨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기술이전 방법은 세 가지임. ▲특정 분야에서 외국 자본이 독자 기업을 세우지 못하게 함. ▲중국 투자를 중국 당국이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움. ▲ 정보통신 분야에 특별히 적용되는 보안 조치와 통제 기준이 있음. 예를 들어 2017년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데이터를 반드시 국내에 저장해야 하며, 외국으로 전송하는 정보는 모두 보안 평가를 받게 되어 있음. 미국이 여기에 예민한 것은 미국의 주요 수출 분야이고 군사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기 때문임.
- 셋째, 자본시장과 금융 시스템 개방. 중국은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그동안 중국의 자본축적은 화교 자본에 의존. 최대한 외국 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 함. 또한 국유기업을 보호할 수 없음. 수익률은 금융위기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부채 비율이 높음. 국유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은행과 주식시장도 부실화될 것이고, 국유기업이 담당하는 생필품 생산, 국가 안보 관련 재화에 타격을 받고, 많은 고용을 책임지고 있어서 사회적 불안이 발생할 것임.
-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미국보다는 중국이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음.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27년 만에 최저였고, 제조업 이익 증가율은 감소 전환, 자산수익률도 하락세임.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음. 중국의 경제전략은 내수,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을 국유기업으로 이전 시켜 생산성 높은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구조개혁을 하는 것임.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지지기반이기도 함.
-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새로운 헤게모니에 미달함. 중국의 경제성장은 농촌의 잉여 노동력, 화교 자본을 바탕으로 한 특수한 사례로 보편적인 자본축적 체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저임금, 위안화 평가절하 전략을 통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수출은 동남아, 라틴아메리카와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음. 일대일로 등 해외개발 사업은 중국 기업이 독점하면서 상대국가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며 특히 대중 수출 의존도가 큼. 올해 6월 국제통화기금은 무역 갈등의 향후 시나리오를 네 가지로 가정.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상호 관세 부과),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로 협상 타결, 중국 대미 수입 증대로 협상 타결. 이 중 자동차 관세 부과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한국은 당사국을 제외하면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것으

로 나타남.

⑶ 미중 군사경쟁

- 시진핑은 중국몽과 함께 이를 위한 강군 건설, 강군몽을 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능타승장, 能打勝仗)' 군대 건설을 핵심으로 전쟁준비태세 강화, 작전능력, 억지 및 실전 능력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은 중국군의 현대화 발전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2020년까지 기계화를 실현하고, 정보화 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며, 전략 능력을 제고한다는 단기적 목표를 제시. 2035년까지 군사 이론, 조직형태, 인력 및 무기 장비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세기 중반까지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 군대로 건설할 계획.
-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자국산 항공모함 진수, 신형 구축함 및 잠수함 전력 증강, J-20 스텔스기 전력화 등 해·공군력의 강화와 DF-21D 대함 탄도미사일, DF-31AG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미사일 능력, 우주 및 사이버 능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맞춰 군대도 개편. 기존 핵미사일 운용 부대인 제2포병을 확대 개편해 로켓군을 창설했고, 사이버·정보전 등 현대전에 대비한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함. 기존 지역별 7대 군구의 벽을 허물고 통합작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육군통합지위기구도 창설.
- 남중국해는 중국 군사전략의 공세적 성격이 잘 드러남.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핵심이익으로 상정하는 지역에서 미군의 진입을 억제, 지연, 방지하기 위한 '반접근 지역거부(A2/AD)'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음. 위성 파괴 시험, 잠수함 전력 증강, 탄도미사일 대함 용도 개량 등의 조치를 취함. 뿐만 아니라 해·공군을 통한 원양훈련을 상시화하고 있음. 이는 안보적 측면에서 대만을 통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상하이, 홍콩 등 핵심 경제중심지의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며, 해저 천연가스, 석유 등 해저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음. 일대일로의 하나인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은 중국의 최초 해외기지인 지부티(홍해 입구)와 연결되며, 대만 분쟁 시, 미국 해군을 포함해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중국의 에너지 공급, 무역 수송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항구들임.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처럼 유사시 중국군이 주둔할 수 있음. (이른바 '진주목걸이 전략')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아시아 순방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밝힘.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근본적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인도와 일본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는 전략. '진주목걸이' 전략에 대응하는 일본, 미국, 호주, 인도를 잇는 다이아몬드 대열임. 중국인민군이 2030년

까지 전함 500척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에 맞춰 미 해군 전함 수를 최소 350척까지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의 해군력·공군력·육군력 강화, 아시아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전력 강화와 다각화(괌과 남한에 추가적인 전함 배치), 남중국해에 항구적인 전함 배치, 일본·인도·남한 등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협력 강화 등을 모색('항행의 자유' 작전).

- 미국은 2월 1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위반을 지적하며 INF 탈퇴 계획을 밝힘.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일 연두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를 포함해 다른 형태의 군사조약을 협상할 수 있다"며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나라보다 군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경고. 중국은 미국의 3자 INF조약 체결 제안을 거부함.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이 전력의 95%를 차지하며, 무엇보다 대만해협에서 미 7함대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중거리 핵미사일이라 판단하기 때문임.

(4) 소결

- 1970년대 이후 쇠퇴해 온 미국 헤게모니를 유지한 동력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지되는 달러의 기축통화로서 지위와 이에 협조한 동아시아의 수출 달러 환류.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로 미국과 유럽 등 중심부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존 지배 엘리트의 정당성이 약화. 대안좌파의 부재 속에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있음.
- 중국은 2010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함. 시진핑의 중국몽은 주변국들에게 수용 가능한 선진적 민주문명질서로 비치기보다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반한 강권적인 세계질서 구상으로 비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미국은 중국이 자유무역 질서와 규칙을 위반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중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음.
- 군사 갈등도 고조되고 있음. 시진핑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은 중국군의 현대화 발전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핵심이익으로 상정하는 지역에서 미군의 진입을 억제, 지연, 방지하기 위한 '반접근 지역거부(A2/AD)'전략을 공세적으로 추진. 미국은 이에 맞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 또한 미국, 소련 간 INF조약을 파기하고, 미중러 3자조약을 제안했으나 중국이 거부하면서 남중국해, 나아가 한국과 일본까지 미사일 배치의 가능성을 열어둠.
-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와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 체제, 중국몽과 같은 민족주의의

확대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아님. 중국의 패권 도전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오히려 주변국들로 하여금 경제적·군사적 민족주의, 포퓰리즘적 대응을 강화하게 촉발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잠정적인 양보,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그러나 그러한 단기적 전망은 트럼프의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현재 민주당 후보들은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입장임), 혹은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내포하고 있음. 더 큰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중국의 대미 수입 증대, 어떤 합의라도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될 것임. 또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남중국해 등 영토·영해 문제를 둘러싼 군사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음. 또한 그 분쟁이 한반도에서 극대화될 수 있음. 대안적인 지역 질서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약화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음. 이러한 객관적 정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의 문제점을 평가해야 함.

3. 북미 협상

(1) 북한의 핵무장과 2018-2019년 정상회담 외교

- 2016-2017년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단행했고,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이 과정에서 유엔의 대북제재는 점차 강화되었고, 트럼프와 김정은은 설전을 주고받았음. 북한에게 핵 무력 완성은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로, 새롭게 등장한 젊은 지도자가 핵 무력을 완성함으로써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이끌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권력승계 정당화) 두 번째는 좀 더 실제적 의미로, 권력교체기에 등장할 수도 있는 북한의 내분 사태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수단. 즉 북한은 권력세습과 체제유지를 위해 점점 거세지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여 핵 무력 완성을 추진. 이것은 수령론('신화화된' 개인숭배)을 핵심으로 하는 극단화된 스탈린주의(국가자본주의)라는 북한의 사회성격에서 구조적으로 비롯함. 전쟁위기로 치닫던 국면은 2018년부터 반전되며,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이벤트로 이어짐. 이러한 전환은 핵·경제 병진노선의 연장선에 있는데,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UN과 미국의 경제 제재라는 경제 발전의 장애를 해결하고자 모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와 함께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낙관

론이 확산. 그러나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북미 관계 개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 부재. 9월 5일 특사 방북과 9. 19 평양공동선언 등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정체됨. 2019년 초 다시 협상 논의가 시작되어 2월 27,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으나, 그 결과는 공동합의문 없는 결렬.

- 미국은 북한이 영변 외 핵시설의 폐기를 거부하면서도 '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함. 미국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서 영변핵시설의 비중을 높게 보지 않음. 게다가 이미 확보한 핵물질과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고려하면 영변의 영구 폐기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 한편 북한은 2016년 후 채택된 5건의 제재결의문 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반박함. 그러나 2016년 이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유엔 제재들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와 무기 수출 금지 정도를 담은 것임. 미국은 2016년 이후에 이뤄진 경제 전반에 대한 제재들이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고 있음. 결국 영변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의 교환이 예상되었으나, 북한과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스몰딜'보다는 '노딜'을 택했음.

⑵ 북미협상의 쟁점

- 쟁점은 비핵화의 개념과 로드맵임. 2018년 초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를 목표로, 일괄타결 방식을 타진했었음. 이는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서 제출을 전제로, 비핵화 시간표 합의, 검증(사찰)을 동반하는 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의미. 그러나 현재 실제로는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서 제출 약속이나 비핵화 시간표 합의도 없는 상태로, 사실상 비연속적인 (단계적인) 협상이 진행 중.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처럼, 일정한 로드맵 없이 단계적 합의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임. 정상회담 외교를 통해 대화를 지속하고 신뢰를 확인하며, 자국 내에서 일정한 성과라고 홍보할 수 있으나, 비핵화라는 문제는 그대로 남기 때문임.
- 협상의 목표, 비핵화 개념의 쟁점을 거칠게 분류하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확인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어야 하는가('한반도 비핵지대화'), 아니면 핵동결·핵군축을 실질적 목적으로 하는 협상이어야 하는가('단계적 비핵화')라고 할 수 있음. 9.19 공동성명은 1항에서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면서 다음을 합의함.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한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한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1990년대 초반까지 통일운동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지지했음. 예를 들면 1990년 1차 범민족대회 서울 채택 결의문에 명시되고 범민련 강령에도 있었음. (그러나 2001년 개정 강령에는 빠짐)

- 반면 하노이 회담 이전 《민플러스》의 '4.27시대 연구원 칼럼'은 이번 북미협상을 핵보유국 간의 대화와 담판으로 규정함. 김정은 위원장의 4불 원칙(핵무기 생산, 시험, 사용, 전파중지)이 현 단계 비핵화의 수준이라는 것임. 즉 북한의 의도는 명백히 핵동결·핵군축이고 미국과도 합의했다는 주장. 그러나 하노이회담은 결렬되었음. 그 뒤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갖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수뇌회담을 하자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힘. 즉 미국에서 영변핵시설 폐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라는 요구. 동시에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개선된 북중, 북러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압박. 남한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입장이 정당하다는, 즉 미국이 문제라는 입장이 상존.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뒤 발생한 사회운동 내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
-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북한과 미국 양자로부터 동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없어서 모호함. 이 과정에서 '중재자'를 자처했으나, 북한은 남한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이후에는 오지랖 부리지 말라는 비난까지 함. 또한 남북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하면서도,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 무기 수입을 늘리는 등의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음. 문재인 정부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7.5% 증가로,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4.2%보다 높음. 특히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신규 무기 도입·개발 비용을 포함. 이렇게 모순적이고 무능한 행보는 다시 북핵 협상에 대한 남한 사회 내 국론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음.

⑶ 미국의 '핵공유' 제안

-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5월부터 단거리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미사일 발사를 재개함. 트럼프는 단거리 미사일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제제를 계속 이어나감.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북한은 8월 23일 폼페이오 장관을 '독초'라 비난하다가, 9월 2-4일 왕이 외교부장 방북 때 실무회담 재개 의사를 밝힌 이후, 9일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힘.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물러난 틈새를 파고들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실무협상 결렬을 대비한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있음.
- 9월 초 트럼프는 볼턴을 경질하며 "'리비아 모델'은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라 언급함. 그러나 현재 대북 실무 협상을 관장하는 폼페이오와 비건의 협상 전략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대체적임.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미국 민주당이 빠르게 탄핵 조사와 표결을 추진하면서, 첫 소환 대상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지목하는 등 미국 내 정세가 급변하고 있음.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협상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 내 상황과 동맹국간 관계를 고려할 때, 최소한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절한 시점에 핵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영변핵시설 플러스 알파의 핵(시설) 폐기 계획을 제시해야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미국은 북미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일 핵공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미 국방대학교출판사가 발행하는 <계간 합동군>(Joint Force Quarterly) 2019년 3호에 실린 <21세기 핵억지: 2018년 핵태세보고서의 작전운용화> 보고서가 국내에도 크게 주목받음. 실제 야당과 보수언론에서도 이에 호응해 '한국식 핵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 (정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함) 이후 대북특별대표 비건도 모교 미시간대 강연에서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받는 일본과 한국 같은 동맹국에서 핵능력 제고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 실제 미 국방대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함. 하나는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충분한 수만큼 배치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중화'시켜야 한다는 것. 이는 패트리어트나 사드와 같은 미사일 요격체계를 의미할 것. 또 하나는 위기 시에 비(非)전략핵능력(전술핵무기)을 선택된 아시아-태평양 동맹국 특히 일본, 한국과 공유. 이를 '미국의 관리를 받는 공유'(custodial sharing)라고 명명함. 다만 정치적, 군사적 제약이 있으므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임.
- 따라서 전술핵을 괌 미군 기지에 보관하고 한국과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F-35A

에 핵탑재를 하는 방안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음. 앞서 살펴보았듯, 미국은 INF를 탈퇴하면서 “새로 개발하는 중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음. 아직 한국에 배치할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하나,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 북한의 핵능력 확장이 지속될 경우 심리적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술핵공유부터 시작해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로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음.

- 여기서 ‘정치적, 군사적 제약’이란 한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일 것이고, 일본에서는 비핵 3원칙일 것임.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정부의 기본정책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표명한 뒤, 1971년 일본 중의원이 채택함. 그 후로도 일본의 역대 정권은 국회 답변을 통해 비핵 3원칙의 준수를 강조함.

⑷ 소결

- 실현가능성도 쟁점이지만, 설령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동결을 승인받으며 체제를 보장받으려 한다면, 이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와 일본의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일-중국 간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핵공유 옵션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임.
-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미국의 패권적 성격, 북한과 미국의 비대칭성에 맹목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미국이 주도하는 NPT 체제의 한계는 분명함. 1970년 3월, UN에서 발효된 NPT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에 대해 각각 다른 조약 의무를 부과함. 핵무기 비보유국은 모든 핵활동에 관해 IAEA의 사찰과 제재를 받지만, 보유국의 핵무기 제조, 개량 과정은 사찰 대상이 될 수 없었음. 따라서 핵무기 보유국이 단계적으로 핵 감축을 실현한다는 원칙이 강제될 수 없었음. 그러나 NPT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비핵보유국이 이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게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향이 될 수는 없음.
-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당장 결실을 맺기는 어려워 보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이 네 번이나 만나 ‘한 참모부’를 약속하고 푸틴 대통령도 북한에 ‘다자 안전보장’의 지지를 했지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조차 대북제재망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것이 국제 현실임. 현재로서는 ‘반핵평화운동’의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축으로 하여, 일본의 비핵3원칙과 평화헌법을 지지대로 하여, 동아시아 비핵

지대 창설을 위한 대중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장기적 노력이 악순환을 막는 길임. 한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 요구를 중심으로, 상황이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남북미의 군사적 행동 재개를 우려하거나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

4. 한일갈등과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1) 최근 한일갈등의 배경

- 2019년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고 8월 7일에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선포함.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현재 실제 수출 규제를 하지는 않음. 한편, 한국 역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고, 8월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일본의 수출규제는 기본적으로 2018년의 신일철주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교적 대응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대응이 미국의 묵인 하에 진행되는 것인지 명확히 검증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핵심 동맹국 일본에 불리한 입장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또한 이왕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할 때, 상대편의 가장 아픈 곳을 공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에 타격을 가한 것. 이것을 한국의 첨단산업 죽이기라든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을 달성하려는 속셈이라는 해석은 일본의 의도를 과장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반일 드라이브를 추인하는 효과로 이어짐.
- 한국이 이런 사태를 예측하고 대비한 것 같지는 않음.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2013년 고등법원은 원고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 2012년에서 2018년 사이에,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국내적으로 갈등이 첨예했고, 박근혜 퇴진 이후 '사법농단 의혹'에 '일본 강제징용 재판 고의지연'이 포함됨. 이러한 국내 정치 지형이 일본과의 적극적 외교적 노력을 상대화하고, 정부와 사법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 이런 상황이 문제를 더 풀기 어려워지게 만들었는데, 민주연구원의 내부 보고서 폭로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이런 한일 갈등이 총선에 호재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향후 전망과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 제시. 첫째,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하며 한

일조약 체제가 붕괴. 이 경우 어업협정이나 재일조선인 법적 지위 협정도 위태로울 수 있음. 둘째, 1965년 협정에 명기된 대로 중재위,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 셋째, 협정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단을 만드는 방법. 현재 한국 정부가 공식 제안한 해결책은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공동 자금 마련하는 1+1 안임. 일본은 3국 중재위 안임. 서로 거부함. 한일기업에 한국정부까지 포함한 재단 설립, 1+1+a 안에 대한 타협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음.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 없고,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음.

⑵ 한일 갈등의 쟁점

- 우선 대법원 판결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음.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다수의견과 별개의견2,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음. 다수의견의 주요 논지는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를 협의한 것이고, 따라서 위자료 성격의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런데 별개의견2는 청구권협정은 강제징용 위자료가 포함되었다고 봄. 그러나 외교보호권만 포기되었지,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임. 마지막으로 반대의견은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통한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입장임.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보통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됨. 그런데 이것은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의 쟁점임. 대법원 다수의견의 핵심은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임. 이것은 청구권협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 즉 한일 국교관계 자체를 비판한 것임. 또한 국제적으로도 쟁점이 됨. 전후 보상문제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식민지배를 불법이라 규정하지 않음. 물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한일청구권협정이 정당한 것은 아님. 그러나 그것은 식민지배라는 과거사를 가지고 일본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주장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을 더 극대화할 뿐임.

	다수의견	별개의견2	반대의견
강제징용손해배상 청구권협정에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음	포함되었음	포함되었음
외교보호권만 포기 소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언급 없음	외교보호권만 포기	소를 통한 권리행사 불가능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함	가능함	불가능함

- 한일청구권협정은 친일파 박정희가 추구한 친일노선의 귀결인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거치며 일본과 직접적 전쟁 당사국이었던 중국은 1972년 국교 정상화 공

동서명에서 전쟁 배상 청구 포기를 선언함. 또한 '항일무장투쟁 전통'을 강조하는 북한도 일본과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국가·민간청구권의 상호 포기와 경제협력이라는 한국과 같은 방식의 합의를 진행함. 동아시아 각국의 전후처리 과정은 국가 간 세력관계라는 구조적 제약과 협상 당사국의 전략적 선택이 동시에 존재했었음.

- "한일 민중연대를 통해 불법적 한일병합을 원천무효화하고 식민지배 청산을 완수하자"는 주장은 실천적으로 복잡한 쟁점임. 실제 일본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일본공산당계나 구 일본사회당계 등 전후 혁신계에 뿌리를 두고 존재함. 1952년 일본에서 '조선 문제'에 대응하는 운동 흐름으로 일조협회가 결성. 북한 한일회담을 견제하면서 대일 접근을 모색. 일본 혁신계와 새로운 연계채널을 만들고자 했고, 일조협회는 그 매개가 됨. 1960년부터 한일회담 반대 슬로건 제시됨.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일본 비우호 정책을 변경해 일조관계를 정상화시키자는 구호도 제시됨. 이런 운동 과정에서 한일조약에 반대하려면 일본 자신의 식민지주의, 제국주의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 일조우호계 단체가 도달한 결론이고, 일본 지식인들도 이런 입장에 동조함. 이런 주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965년 협정을 전후한 시점에 이런 문제의식은 당연히 정당성을 지녔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밀고 나가서 결코 한일협정이 체결되면 안 되었다든가, 나아가 지금이라도 무효화하고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해 한일관계의 단절도 불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음.

⑶ 대응방향

- 현재 시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역사적으로 비판적 평가를 제기하는 것과 이미 체결된 협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양국이 상대방 국가에 대해 자기주장을 펼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 있음. 한국 내부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고민해야 함. 정부가 제시한 1+1안 조차 왜 한국기업이 기금마련에 참여해야 하는지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말한 적 없음. 소송 대리인단은 유감이라 밝혔음. 외교적 대안에 대한 국내 동의지반부터 만들어 가야 할 것임.
- 사회운동은 우선 현재 국면에서 맹목적 반일감정 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야 함. 이를 전제로 현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반일 민족주의 분위기에 분명히 반대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국 끌려갈 가능성이 높음.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극단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숙고해야 함. "생존을 위해

자존을 포기하지 말자"(한겨레신문), "평화경제로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문재인) 같은 주장을 더 밀고 나가면 경제관계 측면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 질서를 이탈하는 결론으로 이어짐. 이는 현재 영국의 브렉시트 논의랑 비교해 볼 수 있음. 한일 경제관계 단절이 기회가 된다는 주장은 주관적 희망일 뿐임. '대안세계화'는 노동자운동이 국제적 노동표준 수립을 위한 국제연대 같은 대안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해, 동아시아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내적 비판을 통한 개조를 시도하자는 것임. 자유무역 질서를 거부하고 이탈하자는, 오히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반세계화'적 논리에 가까움. 브렉시트의 예처럼 이는 실행 가능성도 낮고, 민족주의나 보수주의, 심지어 인종주의나 외국인혐오를 동반할 수 있음.

⑷ 역사인식과 사회운동

- 현 정세와 역사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인식의 필요성은 당위적 의미를 넘어 사회운동의 정세적 과제임.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현대사, 즉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발전해 온 역사에 대한 인식 문제가 현재 동아시아의 정세를 규정하는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임. 특히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일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포퓰리즘 정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과거사 청산·친일파 척결과 같은 역사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식민지배 책임 문제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쟁점은 이번 강제징용 재판과 이에 대응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극대화됨. 이 쟁점은 사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 내부에 존재함. 문재인의 '주류교체론'은 분단사관에 기초. 일제 식민지배가 조선이 자주적으로 근대화하는 경로를 가로막았으며, 그로 인해 수탈 받고 발전이 지체되었으며, 그 친일 잔재가 남아 분단·군사독재로 이어졌다는 인식. 이에 대한 반작용이 식민지근대화론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통해 근대화되었고, 고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인식. 최근 『반일종족주의』가 이슈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한일갈등을 계기로 다시 쟁점이 되고 있음.
- 한편 일본에서는 1996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나타나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사관과 '도쿄재판사관'에 의해 일본의 역사교육이 지배되어 왔다'고 비판하며 큰 대중적 호응을 얻음(이른바 '자학사관' 비판). 이 과정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대한 서술은 사라지게 됨. 93년 당시 모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있었으나, 2000년 검정 통과 교과서 7종 가운데 4권에서 사라짐. 2004년에서는 1개만 '위안소'라는 기술을 남기고 완전히 자취를 감춤. 역설적인 것은 시기만 놓고 보면, 90년대 중반까지 위안부에 대한 서술이 교과서에 실리는 시기에 한국은 그 서술

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이것이 다시 새역모와 같은 일본의 대중적 반감을 일으키며, 교과서를 실제로 '우경화'시켰다는 점임. 한국과 일본의 양 국에서 민족감정, 민족정체성에만 근거해서 역사를 사고할 경우 공동의 역사인식은 불가능함.

- 한반도 근현대사에 대한 분단사관과 식민지근대화론의 인식 양자를 비판할 필요 있음. 분단사관은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통일을 통한 민족국가 형성을 '근대화'로 개념규정하고 한반도의 역사가 이를 향해 간다는 목적론적 사고를 함.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식민지배를 설정해서 친일파 비판으로 귀결. 일제와 친일파가 연속성을 가지고 한국을 지배하는 것처럼 상상.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서 20세기 국제법 기준에 따른 불법성과 비인도성에만 주목하며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붕괴하는 봉건제에서 다른 사회구성체로 이행하지 못한 조선 지배계급의 문제와, 이를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민중을 위한 대안도 구성하지 못한 지식인의 한계를 분석하고 연구해야,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 한편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선은 식민지 자본주의로 발전함. 생산력의 발전도 있었으나 식민지 자본주의 특성 상 더뎠고, 민족적 자본축적은 제한됨.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가 생활수준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것은 상식임. 식민지 근대화론은 생활수준의 상승만을 강조. 그러나 생활수준의 상승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낮았음. 또한 일본자본가에게 조선 노동자가 착취되는 것이 바로 수탈임. 특히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수탈이 심화되어 자본축적은 더 어려워짐. 조선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자본주의 모순과 식민지의 모순이 함께 나타난 것. 식민지근대화론은 미국식 시장경제를 상상하며 식민지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무시. 반대로 분단사관, 식민지수탈론 중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봉건적 수탈을 상상해 자본주의 착취의 일반성을 무시.

(5) 소결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한국의 첨단산업 죽이기라든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을 달성하려는 속셈이라는 식의 해석은 일본의 의도를 과장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반일 드라이브를 추인하는 효과로 이어짐. 동아시아 각국의 전후처리 과정은 국가 간 세력관계라는 구조적 제약과 협상 당사국의 전략적 선택이 동시에 존재했었음. 현재 시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역사적으로 비판적 평가를 제기하는 것과 이미 체결된 협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 한국 내부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고민해야 함. 사회운동은 우선 현재 국면에서 맹목적 반일감정 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야 함. 이를 전제로

현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한국과 일본의 양 국에서 민족감정, 민족정체성에만 근거해서 역사를 사고할 경우 공동의 역사인식은 불가능함. 한국에서부터 한반도 근현대사에 대한 분단사관과 식민지근대화론의 인식 양자를 비판할 필요 있음.

5. 결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비판과 사회운동의 과제

- 지금까지 살펴본 미중 갈등, 북핵문제, 한일 갈등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님.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는 20세기 미국 헤게모니의 자본축적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미-소간 냉전을 거치며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음. 불황기 헤게모니 관리 체제로 나타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 속에서 쇠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중국의 지역 내 패권 강화와 미국에 대한 도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보다 호전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연속적 핵·미사일 시험에 미국이 '화염과 분노'로 반응하면서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조될 때에 취임함. 2017년 말 중국과 '3불 원칙'을 합의하며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하며 국면이 전환됨. 그러나 6월 북미정상회담을 정점으로 상황은 교착되기 시작함. 9월에 방북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나아간 것이 없었음. 결국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끝남. 한편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레이더·초계기 갈등으로 악화되던 한일 관계는 2019년 독도 교과서 갈등에 이어 상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갈등이 점차 악순환. 이 상황에서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갈등을 한층 더 고조시킴. 또한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합의 위반이라며, 한국의 '이중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규탄함.
-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당당한 외교', '균형외교'를 말하지만,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전략은 부재함. 한일갈등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외교를 만들어가기 보다는 현안이 터지면 대응하는 방식임. 북핵문제에 너무 많은 외교적 역량을 썼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정작 북한도 미국과 협상을 우선시하며 한국을 흔드는 상황임. 오히려 사드 합의, 과거사·독도 분쟁, 지소미아 파기 등 지금까지 한국이 보인 행보들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동맹에 긴장을 만들

고, 더 나아가 친중, 친북으로 경도된다고 평가받을 여지를 주고 있음. 전작권 전환 공약도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음.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했지만, 사령부를 평택 미군기지에 두기로 합의함. 게다가 미국이 참모조직을 늘리고 작전기능도 살리는 등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음.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데, 한미연합사를 한국에 넘겨도 유엔사는 남기 때문.

-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를 두고 사회운동 내에서도 많은 혼란과 쟁점이 야기되고 있음. 민족해방(NL), 통일운동 진영은 과거 민주당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친일잔재 청산' 등 더욱 일본에 더욱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자유한국당이나 보수언론도 '토착왜구'라는 식으로 같이 취급). 미국 패권의 자본주의 비판,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비판해 온 좌파진영에서도 역시 '진의'를 의심할 뿐, 한미일동맹의 폐기라는 관점에서 식민지배 배상(대법원 판결 이행)과 지소미아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고 있음. 두 입장 모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걸, 더 잘하면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다만 후자는 문재인 정부가 의지가 약하다는 분석이 추가된 것뿐임.
- NL의 입장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같다고 보면 되지만, 좌파의 입장 또한 문재인 정부의 민족주의·포퓰리즘의 문제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문제임.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의 야당 세월을 거치며 포퓰리즘 정치를 강화함.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정당성이 약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음. 민주연구원의 '혁신적 포용국가론' 연구보고서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음. "혁신적 포용국가는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사랑, 나눔, 섬김을 구현한 사람존중국가입니다." 또한 혁신적 포용정당으로서 민주당의 비전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진영정당체제를 정의와 불의, 상식과 몰상식, 공정과 불공정의 중심정당체계"로 전환하는 것임. 자유주의와 이것을 비판하는 사회주의라는 현대적 의미의 이념을 부정하고, 그 이념의 공백을 도덕적 수사와 민족적 정체성으로 채우고 있는 것임.
-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민족주의·포퓰리즘적 성격을 고려하면, 다시 한미일 동맹으로 회귀해도 문제겠지만, 갈등이 극단화되며 기존 한일관계가 사실상 단절되거나, 동아시아 자유무역 체제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상황에 내몰릴 경우, 국내 여론이 양분되고 극단화되며 발생할 후과와 반작용은 재앙 수준일 수 있음. 사회운동은 이런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숙고해야 할 것임.
- 미중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미협상이 매우 불안정한 변수라는 것을 고려하면,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나 개입 축소가 곧바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로 이어지지 않음. 또한 대법원 판결이나 지소미아 파기와 같은 행위가 동아시아 냉전 질서를 데탕트 국면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아님.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

주, 균형외교를 지향하며 북중-미일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관적 환상임. 나아가 남북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식의 선동은 매우 위험함.

- 사회운동은 우선 현 정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부터 줄여나가야 함.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북핵에 대한 무비판적인 남북경협이나, 반일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대안적인 경제사회구조와 평화를 향한 방향이 될 수 없다는 점임. 대안세계화인가, 반세계화인가라는 쟁점을 정세인식에 적용해야 할 것임. 현 시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보다 포퓰리즘, 보호무역주의가 만들고 있는 반세계화에 대한 비판이 더 시급함.
-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이라는 점과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가운데 좌파적 대안도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섣불리 근거 없는 대안을 찾기보다는 경제위기, 전쟁과 같은 노동자민중의 삶에 극단적인 위험과 파괴를 만드는 상황을 제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확장가능한 대안적 이념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현재 보수세력이 선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사회운동이 자본주의 비판의 관점에서 주도할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할 것. 또한 국제주의,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노력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것임.
- 첫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반세계화의 강화가 아니라 대안세계화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노동자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임. 국제적 노동표준, 초민족자본의 글로벌 공급사슬에 대한 통제, 무역협정에서 노동조항에 개입하는 노동기준 연계 전략 등이 이러한 고민에 속함.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인 제약임. 현재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무역질서는 미국이라는 시장을 두고 수출경쟁을 하는 구조. 또한 노동자운동의 주체적 상태 역시 비대칭적임. 중국과 북한에서는 사회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등의 노동자운동은 공동의 요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
- 둘째, 현재 대안세계화를 위한 동아시아 노동자연대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전쟁위기가 상존하고 있는 지역 내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 차원에서 반핵평화운동 관점의 동아시아 연대를 모색해볼 수 있음. 핵무기금지조약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비준을 전 세계 정부에 요구하는 국제적 운동 흐름에 주목해 볼 필요 있음.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 (반대 1, 기권 1)으로 통과한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로 나아간다는 목표로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첫 번째 국제적 합의. 가입국은 핵무기의 개발, 시험, 생산, 비축, 배치 전달, 사용, 사용 위협을 금지함. 핵무기금지조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50개국 이상에서 발효되어야 하는데

현재(2019년 10월 초) 32개국에서 발효되어 18개국이 남았음.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4개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또한 한국, 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된 국가도 불참을 선언함. 물론 이것 또한 현실적인 제약은 분명함. 한국에서부터 남북미의 군사적 행동 재개를 우려하거나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대중적 여론을 만들어 가야함.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일본의 평화헌법은 가장 중요한 지지대임. 그런데 현재와 같은 영토와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이러한 여론을 만드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과거사를 해결하기는커녕, 침략과 전쟁 같은 과거의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름. 최근 한일 노동자, 시민 간 교류와 공동 행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로 각국의 지배계급을 비판할 뿐 실제 공동의 역사인식을 확립했다거나, 현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적 해법을 합의하는 사례는 없었음. 무엇보다 이러한 활동이 정세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도 못함.

-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인식하며 한국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민족주의·포퓰리즘적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대안이념을 재건하며, 사회운동을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 2000년대 남미와 남유럽에서 좌파들의 한계와 실패를 평가하며, 강한 의미에서 일국적 우회로는 없다는 판단이 필요. 한국에서부터 진정 현실적이고 정세적 과제로서 국제주의, 평화주의적 사회운동을 건설해야 한다는 결의를 해야 할 것임.

[토론1]

<격동하는 동아시아, 어디로 향하는가?> 토론문

남종석 |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1. 이 발표문의 토론자로서 두 가지 곤란한 지점을 이야기 합니다. 토론문을 읽으면서 아, 이건 내 연구분야가 아니라 독자의 지위에서 토론을 해야하는 상황에 부딪혔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중 헤게모니 갈등, 북미 협상 국면의 고착 상태에 대해서 제가 최근 정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서 한마디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곤란이 존재합니다. 정세를 보는 입장이 매우 유사해서 딱히 이견이 크게 없다는 점입니다. 쟁점이 형성되면 이를 두고 토론과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동의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토론해야할지 곤란함을 느낍니다.

2. 과거 중국이 부상할 때 저는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대 이후 미국이 벌여온 국지전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예멘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중동 개입은 세계적인 재앙을 만들고 있었고, 반면 중국의 부상이 미국-나토 동맹의 제국주의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잠시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99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의 경제정책이 '대국-추격자로서' 매우 유효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의 성장이지만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적 틀 내에서 정책적인 언젠다를 잘 관리하는 국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노동착취공장에서 이뤄지는 불행한 현실은 모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초기자본주의에서 보였던 보편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중국 노동운동을 통해 극복해야될 과제라고 여겼습니다.

3. 그러나 중국권위주의적-국가자본주의는, 미국의 침략주의와는 또 다른 면에서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중국은 세계자본주의 붕괴 국면 내에서

어떤 새로운 대안적 성장체제를 만들고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위기 구조 내부에서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며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안적 성장전망 하에서 다른 국가들의 성장을 추동하며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세계시장 내부에서 구축효과를 내는 국가일 뿐입니다. 중국은 새로운 모델이기보다는 한국과 같은 후발 추격자를 자국의 크기에 맞게 잘 모방함으로써 성공한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문제 등에서 중국공산당이 보이는 태도는 위기를 관리는 고사하고 자국 국익에 대해 단 하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폐쇄적인 자기 이익 추구 국가일 뿐입니다.

4. 전후 미국이 기획했던 '자본주의 재건'을 위한 계획 따위는 중국의 시야에도, 이 국가의 성장 전략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국 시장을 개방했고, 유럽과 일본(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주었으며 심지어 현금 지원과 투자 지원도 한 국가입니다. 이를 통해 전후 질서를 재구축했던 주체입니다. 현재 중국이 보이는 모습은 1920년대 자국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세계를 재건한다는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중국은 그럴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는 후발추격 국가일 뿐입니다. 비록 신자유주의의 전위라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세계 경제의 재건과 미국 경제의 성장을 연결시켜 고민하지만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에 대한 매우 일관된 비판 세력이라는 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지식인 사회의 독립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식인들은, 심지어 신좌파라고 불리는 세력들조차 당의 공식적인 입장 넘어 주장하지 않습니다. 탄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5. 이는 동아시아의 질서는 당분간 혼돈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 합니다. 단기적으로만 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자본주의는 위기로부터 탈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중심부 국가들 내에서의 불평등과 인종주의적 갈등과 결합된 정치위기는 지속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갈등 관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그러면 그럴수록 공산당의 권위주의-민족주의 전략은 더 커질 것입니다. 더불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은 군비경쟁의 형태로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전술핵의 확산입니다. 전략핵은 상호확증파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실전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어용'입니다. 그러나 전술핵은 실전용이기 때문에 핵무장을 부추기며 동시에 핵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전술핵 확대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6. 북미 갈등에서 한국 사회운동 세력이 어느 국가도 지지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은 실제로 '리비아 모델'을 실행한 국가입니다. 이란과의 갈등도 유사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 정부-의회가 '실질적인 평화협정' 및 '북한의 경제적 재건'을 실행한다는 어떤 보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핵무장을 해제한 이후 미국이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면 어떻게 체제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이를 빌미로 자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되 더 이상의 핵개발-실험은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을 지지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핵무장을 용인하게 되고 미국을 지지한다면 '리비아 모델'이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를 부정하는 꼴입니다. 반면 동아시아 평화운동 진영은 동원력이 매우 빈곤합니다. 그나마 동아시아에서 평화운동의 동력은 일본에 있는 양심세력입니다. 한국은 평화운동 세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한국의 평화운동의 다수파는 주사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미 종북세력입니다. 한반도 핵무장을 인정하고 미국의 침략주의에만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사회운동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줌의 한국 평화운동 세력과 일본의 좀더 넓은 지반을 갖는 평화운동 세력이 있지만 두 국가의 연대의 길은 점점 그 지반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7. 현 집권당과 한국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의 고유한 한계는 그들이 국내에서 만들어 낸 '친일파', '독재 잔재' 세력이라는 상징적 적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정당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무력화'나 최근 쟁점이 된 '징용노동자 개인청구권 인정'이란 점 역시 일본을 역사의 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것을 통해 정치적 지대를 챙겨온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징용노동자 관련 판결이 중요한 외교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3권 분립 원칙 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징용노동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상하지도, 그에 대해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무역보복을 하자 그것을 한국의 기술진보-굴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 강력한 갈등적 수사를 통해 국내의 지지를 결집시킵니다. 일본의 정치적 퇴행도 문제이지만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을 쟁점화 시켜 국내에서 정치적 지대를 챙기려는 것은 대안적 한일관계가 아니라 갈등, 무질서를 통해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저성장 국면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기는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8. 의회 밖의 주사파는 미국에 대한 태도와 일본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현 집권 세력과 거의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일 세력으로서 한국에서 가장 높은 동원력을 지닌 사회운동 진영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대안적인 세력으로서의 지반을 스스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자신들의 어젠다를 만드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며 남북경협 확대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와 주사파의 공명하는 것이 '남북평화 경제'입니다. 남북평화 경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적 실효성을 과장하는 것은 너무 안이합니다. 저는 일각에서 남북평화경제를 일본과의 관계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비록 경쟁하지만 함께 해야 할 국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당국이 훨씬 불확실성이 강합니다. 남북한 평화 경제와 남북 민중연대는 북한 정권의 핵 포기, 북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전제되지 않은 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9. 이 국면에서 한국 사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토론2]

정종권 | 레디앙 편집국장

2019 노동운동 포럼

[토론]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노동자운동 평가와 반성

[발제]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노동자운동 평가와 반성

- 공멸인가 변혁을 향한 전진인가 -

김동근 |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올해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10년째 되는 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노동자운동의 실천은 오늘날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아마도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심각한 노동자 간 임금 격차, 최근 경사노위를 둘러싼 민주노총의 혼란은 현재의 노동자운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왜 지금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나? 우리는 민주노조 운동의 지난 10년을 반성적으로 평가해보려 한다. 항상 눈앞의 투쟁을 전개하는 "현재진행형" 상황의 활동가들에게 당대 정세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후적이라도 과거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일보라도 전진할 수 있다. 이 평가와 반성은 한국 노동자운동의 일부인 사회진보연대 자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 즉 2008년부터 현재까지를 평가의 시기로 삼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분명한 현실로 드러났다. 미국 자본주의에서 이윤율 반등 요인이었던 법인혁명·관리자혁명·케인즈혁명의 효과가 다하면서 초래된 1970년대 장기불황 이후, 자본주의의 보편적 법칙인 이윤율 저하 경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등장했다. 그러나 실물적 축적 대신 금융적 축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형태로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는 반작용은 일시적이었을 뿐 동아시아 수출달러 환류와 금융투자라는 모순을 심화시켰고, 그 최종적 결과로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양적완화라는 비정상적 수단을 동원해 신용위기가 은행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출구전략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헤게모니 자본주의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구조적 조건을 극복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서 4차 산업혁명이 주

목받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구조적 위기를 역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조건이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0년대부터 추격성장 한계와 중국의 중화학공업 성장으로 과잉설비 위기를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요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임금인상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추진했지만, 경제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이기에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이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구조적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성장률과 인구증가라는 조건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작동 가능했던 노동자운동의 경향, 즉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극대화 전략의 정합성이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그 특수한 형태인 한국의 경제위기는 노동자운동의 그간 실천에 대한 발본적 평가를 강제하고 있다.

두 번째로 2008년 이후 10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 노동자운동 내부에는 정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실천적 합의가 존재했는데, 민주당·시민운동·노동자운동을 포괄하는 반보수전선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직접적 탄압에 대항하여 노동조합의 물리적 토대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부터 문재인 정권에 이르는 동안 시민운동 및 NL운동 진영의 민주당과의 차별성은 점점 약화되어왔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광우병 투쟁과 이어지는 민생민주국민회의를 통한 반MB 투쟁, 이후 문재인 정권 출범까지 이어진 “민주대연합전선”을 통한 선거 대응, 세월호 투쟁, 박근혜 퇴진 촛불,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 대한 입장 등을 통해 드러난다. 민주노총 내에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존재했지만, 주요한 대중투쟁의 국면에서 민주당·시민운동이 주도하는 반보수전선과 구별되는 대안적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민주당 주도의 반보수전선은 모습을 달리하며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반보수전선의 성격 자체가 퇴행적으로 변화했다. 반신자유주의라는 문제의식은 소멸했고 노동자사회운동의 민주당·시민운동에의 의존은 더욱 심해진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단지 과거에 대한 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를 거치며 형성된 반보수전선이 형태를 달리할 뿐 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복되고

1) 통계청은 2017년부터 10년간 생산연령인구가 250만 명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452만 명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되며, 총인구는 202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2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피라미드는 현재의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감소는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한국의 특수성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감소가 증가로 역전되기는 어렵다.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 최저임금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반보수전선의 주요한 매개였다면 최근에는 대북정책과 반일정서를 매개로 하는 왜곡된 민족주의가 반보수전선의 주요한 매개가 되었다.[2] 민주노총은 소득주도성장론을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전략으로 오인·호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NL운동진영의 노선과 공명하는 민족주의를 매개로 한 반보수전선에 종속되고 있다. 현재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혼란은 반보수전선의 극단적 퇴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탄력근로제 등을 매개로 투쟁이 벌어지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당 사이에 정책적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 부문적 요구를 종합한 투쟁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별한 계기 없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2020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그나마 낫지 않은가"라는 인식과 "촛불혁명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운동 진영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노총 집행부 역시 동일한 인식아래서 총선 국면을 맞이하고, 각 산별노조 역시 부문별·단위별 이해를 매개로 민주당과 지지·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권 3년 차를 맞이한 지금 한국사회의 위기는 극대화되고 있다. 위기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전개되는데, 첫 번째로 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파산하면서 한국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2019년 1/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4%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019년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는 1%대의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8~9월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제조업 위기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거쳐 자동차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단기적 상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1.7%로 예상하고 1970년대 7.0%, 2000년대 4.4%, 2010년대 3.0% 성장했던 흐름을 지적하며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추세적인 하락이라 진단한다. 일각에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에서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고정자본투자, 취업자, 그리고 기술혁신을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모두 장기에 걸쳐 저하되는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노동자·사회운동의 위기다. 문재인 정권 3년 차를 맞이한 현재 참여연대·

2) 물론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달리하며 이어져오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 담론 역시 반보수전선의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

민변으로 대표되는 시민운동 진영은 민주당과 화학적으로 결합했고, 민주노총은 정책적으로 시민운동과의 구분이 더욱 희미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노동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고 있다.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연속 강좌'와 같은 사업에서 알 수 있듯 참여연대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며,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2020년 총선 의제 토론회', '재벌 개혁 만민공동회' 등을 통해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다. '사회공공성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가 재(再)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법」이 민주노총의 정책 지향으로 제시된다. 심지어 위원장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되었는데, 이는 민주노총이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운동 진영은 민주당 정책에 종속되거나 민주당 정책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하지 못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및 한국GM 구조조정 등 제조업 위기에서는 단사 차원의 정부지원 요구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중심으로 공약 이행이라는 차원에서의 부차적 전선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총노동의 전략 부재로 드러나는 한편 소득주도성장전략을 근거로 한 개별 노동조합의 경제투쟁 극대화와 조응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정세

100년 전 로자 룩셈부르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그녀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질문을 통해 제국주의 전쟁과 노동착취가 심화되는 야만적 상태로 나아갈지, 아니면 여기서 자본주의를 멈추고 평등과 평화의 사회주의로 나아갈지를 물었다. 우리는 여기에 세 번째 경로를 덧붙여야 할 것 같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언급한 "투쟁하는 양 계급의 공멸"이라는 경로가 바로 그것이다. 어느 계급도 사회 경제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모두가 단기적인 이해에 몰두할 때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주목하는 정세에서는 오히려 세 번째 가능성, "투쟁하는 두 계급의 공멸"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자본과 노동자운동의 무능이 함께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붕괴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자본의 대응은 차치하고, 노동자운동 역시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는 데 실패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들조차 각자의 방어적, 단기적 이해에 매몰되어 있다.

이는 세계 노동자운동의 공통된 곤란이기도 하다.[3)]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중화학공업의 위기와 실업 증가로 표현된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재벌 중심의 중화학공업은 세계적 이윤율 하락 속에서 추격성장의 한계까지 겪고 있다.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례없는 제조업 가동률 하락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중화학공업 전반의 위기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의 대위기를 연상케 한다. 그리고 제조업 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전후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국민경제 전체의 고용과 임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보수 세력의 전통적 정책은 감세, 서비스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으로 제시되었다. 범민주당 세력의 관성적 대안은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육성 등이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 위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방향 모두 성공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국 부르주아의 특징은 이런 정책개혁조차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은 이른바 "창조경제"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정부 내의 경제관료조차 창조경제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범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집권 후에도 프랜차이즈 닭집의 '갑질 근절' 같은 인기영합적인 생색내기식 정책밖에 없었다. 중소기업육성책도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만들어 의욕을 보였지만, 뉴스에도 보이지 않는 무능부처만 만든 꼴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지배계급과 대결하는 한국의 노조운동은 어땠는가?

노조운동의 정세인식부터 보자.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인플레이션 관리 정책이 퇴조하고 대신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과감하게 실행됐다. 한국에서도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었다. 환경파괴 문제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 중 하나였고 나름의 거시경제 효과를 발휘했다. 물론 위기대책의 상수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탄압 역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당시 노조운동은 경제위기를 보수 정부의 정책실패로 규정하며, 혹은 오인하며 민주당 주도의 반보수전선에 참여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경제위기 비판은 생략하고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에 동참했다. 따져보면 모든 책임을 이명박 탓으로 돌리며 민주당의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것은 노조운동에게는 오히려 수월한 방법이었다. 주로 정규직 노조의 방어투쟁을 위해 정부에 대응하는 데

3) 세계 금융위기 이후 좌절한 노동자계급을 조직하는 데 포퓰리즘이 각국의 노동자운동보다 성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최근 프랑스의 유류세 인상을 계기로 폭발한 '노란조끼운동'은 어떤가. 지방과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불만이 누적되어 폭발했지만, 노동조합과는 무관한 투쟁이었다. 시위대의 요구도 문제의 원인인 금융위기를 비판하고 대안체제를 구성하는 데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에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박근혜 정권 시기에도 이어졌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부분 반대하며 인기영합적 공약을 덧붙이는 식이었다.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한 이후 새로 출범한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친민주당-친문재인으로 기울어졌다. 의도했든 아니든 지난 10년 투쟁의 결과가 민주노총을 어디로 끌고 왔는지를 평가해 봐야 한다.

한편, 지난 10년간 민주노총은 더욱 분권화되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총노동을 모아내보려는 코포라티즘식 시도는 보수정부 하에서는 당연히 시도하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2006년 금속과 공공부문에서 확장된 산별노조 역시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앙교섭을 실현하지 못했다. 조직형태를 전환한 무늬만 산별에서 발전을 멈췄다. 총노동을 정치적으로 표현해보겠다던 민주노동당은 2008년 정파 갈등 속에 붕괴했다. 한국 노조운동의 주류였던 국민파, 중앙파의 총노동 프로그램은 좌절됐다. 물론 그렇다고 좌파·현장파의 프로그램이 민주노총을 재건한 것도 아니었다. 현장파는 대기업, 공공기관의 전투적 경제주의에 계급적 수사를 보태거나, 반보수전선의 전투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역설적이지만 현장파는 전투적 경제주의를 통해 계급 내 격차를 더 키웠고, 결과적으로 “계급적 급진성”과는 더욱 먼 길로 노동운동을 이끌고 말았다.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과 노동의 대응에는 몇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자본의 대안은 이윤율 하락에 반작용하는 것이다. 자본생산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술혁신과 이윤분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의 계급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4차 산업혁명론 같은 기술낙관론은 전자에 대한 자본의 기대를 표현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후자의 시도를 표현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본생산성은 정체와 하락을 반복했고, 이윤분배율도 딱히 높아지지 않았다.[4)]

둘째, 노동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경제를 공동체의 필요를 위한 경제로 전환시키는 변혁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노동자 스스로 생산과 사회에 대한 통제를 높이는 일련의 운동이다. 자본주의에서 이런 사회주의적 지향은 노동자운동이 ‘대중’으로 존재하는 노동자를 ‘계급’으로 단결시키는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자운동

4) 물론 20세기 초 영국 헤게모니하 세계 자본주의 체계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미국 헤게모니로 재건된 것처럼, 새로운 계급 타협이나 헤게모니 국가의 출현으로 현재의 위기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후 별도의 글에서 비판하겠지만, 현재는 20세기 초이윤율을 반등시킨 새로운 생산기술과 조직혁신,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의 부상도 부재하다. 자본주의의 순환적 위기의 한 국면이 아니라 최종적 위기 국면이라는 것이 우리의 진단이다.

은 이런 사회주의 운동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 세계적 차원에서 대안세계화 운동의 침체와 함께, 한국 차원에서는 노조운동의 경제주의적 편향이 심화되고 있다. 당장의 예로 자본주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제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민주노조 운동은 개별 사업장 차원의 고용안정 외에는 별다른 대안도 제출하지 못한다.

셋째, 노동과 자본이 타협하는 대안이 있다. 문재인 정부나 노동운동 국민파는 "적절한" 지점에서 노동과 자본이 노사정 타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사관계의 개선과 사회복지, 노동유연화와 임금억제 수용 등이 옵션이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으로 한국의 국민경제를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노동의 경직성 또는 지나치게 높은 임금분배율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위기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본의 능력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다. 노사정 타협으로 자본의 능력을 개선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자본과 노동의 공멸이 있다. 자본과 노동 모두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본가와 노동자가 눈앞의 이해에 몰두하며 각자도생의 방법을 찾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가들은 자본과 두뇌를 해외로 유출한다. 노조는 조직된 노동자의 단기적 이해를 앞세운다.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 문제는, 국민경제가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도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해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 국면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재벌과 공기업과 같이 '대마불사' 부문에서는 위기가 지체되어 나타나거나 위기를 겪어도 공적자금을 통해 얼마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위기비용을 국민경제의 나머지 부문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아르헨티나와 같이 붕괴에 직면한 남미 국가들이 정확히 두 계급이 함께 공멸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국민소득이 정체, 하락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비슷하다. 다만 일본은 탄탄한 국부 덕에 붕괴의 효과를 후세대로 지연시켜 당장 남미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 국부가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는 일본과 남미 사이의 어떤 형태가 될 것이다. 특히 세계 자본주의 위기는 '약한 고리'인 주변부와 신흥시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으로 선진국,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위기가 폭발한다. 이는 지금 남미, 터키, 남유럽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2010년대 저성장-고령화와 '헬조선'류의 청년 세대 낙담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자본과 노동 모두가 대안 제시에 실패하고 있다. 국민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포퓰리즘이 창궐하는 양상 역시 한국에서 남미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노동자운동의 지난 10년 주요 쟁점

노동자운동의 지난 10년을 세 가지 테마로 평가해본다. 첫째, 총노동 전선의 표현으로서 민주노총의 대응이다. 둘째, 한국 노동자운동의 실질적 권력인 재벌·공공기관 노조의 상태다. 셋째, 노조운동의 가장 큰 성과라 할 2000년대 새로 조직된 노조들의 성과와 한계다.

(1) 민주노총의 대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 위기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대응은 '총고용 유지' 또는 '정리해고 분쇄'로 요약된다. 자본이 경영위기 대응으로 정리해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반작용한 결과였다. 최근 10년 내에는 쌍용차와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 저지투쟁이 격렬했다.

두 투쟁 이후 제조업 구조조정에서 갈등 양상은 변했다. 노조와 자본 모두 격렬한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부담이 컸다. 자본은 대규모 정리해고 대신 비정규직(하청) 우선해고와 명예퇴직을 통한 고용조정을 선호했고, 정부(산업은행)는 대규모 해고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후하게 지원했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채무인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한계기업의 생존과 소속 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 고임금을 보장하는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이런 타협은 대우조선, 한국GM 등 대기업에서만 가능했다. 노사정 합의로 '대마불사'가 재생산된 것이다. 그런데 노조는 '총고용 보장'을 주장했지만 현실은 멀었다. 중소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총고용의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소리 없는 해고"가 확대됐다.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대기업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도 상대적 고임금의 방어를 계속 이어갔다.

공공부문 노조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임금·복지 억제)과 구조조정, 민영화에 맞서 방어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공공기관 노조의 2009년('선진화'정책 반대), 2016년(성과연봉제 반대) 연대파업과 철도노조의 2013년 민영화 반대 파업이 대표적이었다. 공공부문 노조는 상대적 고임금을 전제로 한 고용과, 과거에 획득한 성과의 방어에 집중하면서도, 민주노총과 함께 자신의 투쟁을 '사회공공성'을 위한 것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긴축)이 공공서비스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투쟁이 정치적 정당성이 없지 않지만, 실상 경제적 방어투쟁의 성격이 짙었다. 공공부문 노조는 현재도 문재인 정부에 "촛불혁명"의 지분과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10년간 침해된 기존 권리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간, 위기에 처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제시보다는 재벌·공공부문의 기업별 투쟁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물론 단위노조는 정리해고나 임금삭감을 방어하는 경제투쟁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노총조차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다. 민주노총은 제조업·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거시적, 장기적, 계급적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재벌·공기업 단위노조의 입장을 관성적으로 그대로 수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재벌·공기업 노조의 방어투쟁을 총노동의 대안으로 포장하여 정당화하는 사이, 정작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은 뒤로 미뤄뒀다. 더욱 커져가는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불황이라는 거시경제 조건에서 노동자가 서로 경쟁하지 않을 방도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이 사실 민주노총이 답해야 할 것들이었으나, 민주노총은 이런 질문을 피하면서, 광우병 촛불, 세월호 참사 대응 등을 '사회연대운동'으로 규정하며, 정작 노동조합 총연맹으로서 했어야할 사회적 역할은 우회했다.

앞서 말했듯 민주노총은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임금격차 확대와 고용불안을 보수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사실 객관적 지표를 보면 격차와 고용불안은 오히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훨씬 급격히 확대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가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의 전성기였다. 당장 한미FTA만 봐도 체결은 이명박 정부가 했지만, 실제 책임은 노무현 민주당 정부에게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10년간 '정권교체'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집중했다. 단위노조의 투쟁에서도 문제의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경제투쟁의 정치투쟁으로의 발전은 곧 반 박근혜 투쟁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자연스럽게 "촛불 집회"라는 장소에서 민주당과도 만나게 된다.

결국 정세인식과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전투적 투쟁의 한편에서는 민주당과의 암묵적인 공명라는 요소도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집권 이후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가 들어섰다.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 구성에 협조하다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불거진 후 경사노위 참여 여부로 혼란에 혼란을 반복 중이다. 반보수라는 전선을 부여잡지만 반보수전선 그 내부에서 민주당의 반노동정책이 표면화될 때마다 좌충우돌을 반복한다.

민주노총은 옳든 그르든 국민경제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다. 국민경제 전체의 구조적 대안을 찾는 것보다, 관성적인 정권 반대와 조직 노동자의 이해를 추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던 것이다.

최근에도 2019년 1/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을 계기로 거시경제와 임금격차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별다른 검토도 없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다가, 소득주도성장의 내적 모순이 드러나자 침묵

하는 것으로 대응할 뿐이다.
지금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목도한 노동자 계급 상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자 간, 주로 재벌·공공부문과 민간 중소영세 부문 사이의 임금격차 확대와 이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심각한 분할, 그리고 제조업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국민경제의 위기였다. 그런데 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운동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 모순과 대결하는 자신의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는가? 사업장을 넘어선 정치적·사회적 투쟁은 왜 민주당과 구별되지 않는 "촛불항쟁"으로 수렴되고 말았는가?

⑵ 재벌·공기업 노조의 개혁

재벌·공기업 노조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경향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재벌·공공부문은 경제위기의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나 대기업 사내하청도 민간부문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여지가 많았다.
한국의 재벌은 큰 고정자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실현한다. 시장 독점과 하청 구조를 통해 저임금을 활용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한다. 재벌 대기업 노조는 이러한 유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임금을 인상한다. 생산성과 관계없이 정책의지로 인건비가 책정되는 공공부문 노조도 높은 고용안정과 연공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임금상승을 실현한다. 이처럼 재벌·공기업 노조는 재벌과 공기업이 누리는 특권적 위치에 안주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현대차를 보자. 역사적으로 현대차노조의 상대적 고임금은 노동조합의 전투적 임금투쟁과 노조를 기업 내에 가두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현대차 노무전략이 결합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고임금-사회적 고립의 대가는 하청 또는 전후방 산업의 저임금-사회적 배제와 공존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고임금의 기반이 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은 해당 노동자들의 숙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높은 고정자본투자와 자동화에 의한 것이다. 같은 숙련과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임금을 받기 힘들다. 자동차 산업 또는 연관 산업의 평균임금이 현대차노조의 임금만큼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다.
전력·철도·공항 등 공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공공부문은 경쟁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독점을 보장하며 민간의 생산성 상승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달리 임금 수준의 기준이 시장법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

공부문(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사실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이나, 민간 전체의 평균임금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공공부문 임금이 민간보다 월등히 높다면, 이는 결국 민간의 소득 일부를 조세와 공공요금을 통해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이상으로 이전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공공부문 노조는 담합적 노사관계(한국노총)나 전투적 경제투쟁(민주노총)을 통해 민간부문에 비해 높은 임금을 실현했다.

요컨대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의 임금투쟁은 '지대추구적'이라는 비난에 취약할 수 있다. 장기침체기에 노동자운동이 임금투쟁에만 매몰되어 사회적 주도세력이 될 역량을 상실하고 다른 미조직된 집단의 희생을 방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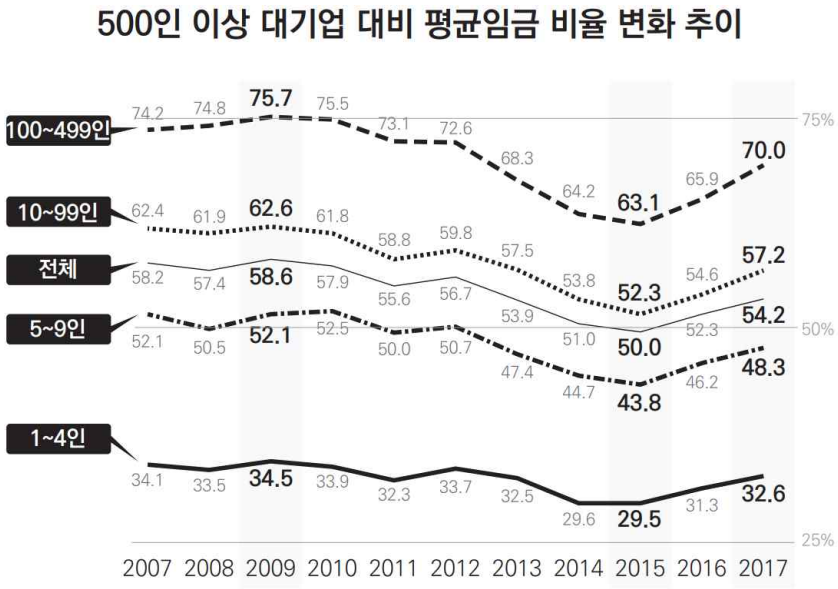
재벌과 공공부문의 조직된 노동자들 투쟁이 나름대로 경제적 이해의 방어에 성공하는 중에, 노동시장에서는 대기업·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소 영세 사업장 간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노동자 평균임금 비율은 58.2%(2007)에서 10년 사이 54.2%(2017)로 더욱 악화되었다.[5] 이런 경향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유연화가 확대되며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 민간부문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생산성 증가만큼의 임금인상도 실현하지 못하고 계속 지체되었다. 재벌 체제의 모순으로 기업 간 생산성 자체의 격차 역시 벌어지고,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초기업 교섭의 토대가 거의 없는 가운데 노동조합도 별로 조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자는 국민경제와 산업구조에 대한 비판이, 후자는 노조운동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2000년대 들어 20년째 만성적으로 정체되었고 재벌·공공부문 노조가 주력인 민주노총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

민주노총은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상향 평준화'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개혁을 주장한다. 그러나 '상향 평준화'의 실현가능성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가 이들을 따라 잡는 것이 가능할지,[6] 그러한 수준으로 임금을 추격하는 것이 과연 구조적 위기시기에 노조운동이 추구해야할 지향이기는 한지, 그 무엇도 검

5) 노민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임금정보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8.12.

6) '상향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한지원(만약 임금격차가 없는 사회라면, 매일노동뉴스, 2019.04.18.) 참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할 때, 노동자·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인구가 모두 재벌·공기업 수준의 소득(연봉 약 8천 여 만원)을 받고자 한다면 국민소득 '이상'을 전부 임금으로 분배한다는 의미가 된다. 한국GDP총액을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도 약 6천4백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벌·공기업의 임금수준은 한국 경제의 축적과 재생산, 기술혁신투자, 국가 기구와 공공서비스를 모두 포기해도 부족한 금액이다. 심지어 기존에 쌓아둔 투자마저 갉아내어 허물어야한다(일각에서는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배분]'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것은 국민경제와 민족국가를 포기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태가 가능할 리도 없을 뿐 아니라, 노동자운동이 추구할 변혁의 방향도 아니다.

토되지 않았다.



어떤 점에서 보면, 노조운동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집중한 것은 대기업 노조들의 책임 방기에 대한 고육책이었다. 세계적으로 익히 알려진 것처럼 임금격차 완화나 저임금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교섭이나 산별교섭으로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것은 중소영세, 저임금 노동자의 조직화와 더불어 교섭력이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의 역할이다. 하지만 금속노조나 공공운수노조 내에서 완성차, 공공기관은 산별교섭을 만들고 확장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대안마저도 민주노총의 주력인 재벌·공기업 노조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투쟁 목표가 아니다. 사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1만원이라는 급진적 요구를 내걸면서도 최저임금을 가지고 총파업을 조직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런 재벌·공기업 노조의 개혁은 가능할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들 노조의 변화 없이 한국 노조운동이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노조 운동이 힘과 뜻을 모아야한다.

민주노총의 주력인 이들 노조를 계급적 이해에 맞도록 개혁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정세분석과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활동가들을 이념적으로 재조직화해야 한다. 느리더라도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 이해관계를 이런 저런 방식으로 나열하거나 포장한다고 이들 노조가 전체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리 없어서다.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국민경제 위기에 무관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재벌·공기업 노조도 거시경제 정책과 산업정책의 큰 영향을 받는다. 역설적으로 한국 국민경제의 장기적 구조적 위기에서 잃을 것이 가장

많기도 하다. 또한 재벌과 공공부문은 국민경제의 가장 주요한 부문이라는 점에서 이 부문에서 노동자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재벌공공기관 노조 개혁에 총연맹과 산별노조의 정책 역량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장기 관점에서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기업·공공기관 노조 조합원들도 관심의 대상이다.

더구나 이들은 어쨌거나 민주노조 운동을 건설해왔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 1996년 총파업과 같은 한국사회를 뒤흔든 노동자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기업 안에서 경제적 이해를 추구했지만, 사업장을 넘어 투쟁해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이기도 하다. 활동가들이 경제적 이해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변혁적 관점에서 거시경제와 한국사회 미래 모습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2000년대 새로 조직된 노조들

2000년대 새로 조직된 노조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 노동운동이 자본의 전략에 어느 정도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조들은 노동자를 더 크게 단결시키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을까?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운동의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세계 금융위기 이후 조직된 노조들은 상당수가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진보교육감 시대를 계기로 조직된 8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법적으로 교육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면서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고, 지속적으로 임금을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비정규직도 수만 명이 조직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은 많은 경우 “제대로 된 정규직화”, 즉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정규직의 호봉제(연공급)”를 쟁취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다. 하지만 한국의 호봉제(연공급)는 60~70년대 고도성장과 인구증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임금체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연공급이 확산된 마지막 계기는 80년대 말이었다. 노동자대투쟁 시기 생산직 노동자들은 사무직 같은 호봉표 쟁취를 중요한 요구로 내걸었다. 3저 호황이라는 경제조건은 이런 요구를 자본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이례적인 정세였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재벌기업에서 제조업 생산직까지 연공급이 확산됐다. 그리고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에는 고용안정이 유지된 재벌·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들에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연공급은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에서 가파른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더 쟁점이 된다. 제조업 노동자의 근속연수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한국은 초임과 20~30년

근무자의 임금차이가 2.83배에 이른다. 독일의 1.88배, 프랑스의 1.34배, 스웨덴의 1.13배에 비해 상당히 크며, 연공급 성격이 강한 일본의 2.54배보다 높다.[7] 문제는 연공급이 도입되고 확산된 배경이던 고성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조건이나 세계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반복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현재와 같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 정규직의 연공급은 저성장저인구 시대에는 지속되기 어렵다.

연공급은 노동생산성 증가가 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마저도 노동생산성이 정체되고 있는 중이다. 노동생산성 상승 없는 임금 상승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 다음으로, 연공급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할 때도 피라미드식 임금형태(승진·승급구조)가 유지된다. 그런데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신입 직원들이 기존 직원의 임금 일부를 부담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 근속을 전제로 하는 기업별 임금체계에서는 연공급과 장기근속이 가능한 재벌·공공부문과 그렇지 않은 민간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격차가 확대된다.[8]

이런 조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이 정규직 호봉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신규 채용 경쟁을 하는 청년들과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충돌하기도 한다. 이는 청년(취업준비생)들의 노동기본권 의식이 낮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경쟁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적자재정을 통해 임금부담을 납세자나 후세대로 넘기기 용이하다. 그래서 더 많은 노동자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둘째, 재벌대기업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활발하게 조직됐다. 제조업 불법파견 이슈를 던진 완성차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이 대표적이다. 불법파견 처리냐 신규채용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현대차와 기아차에서는 투쟁의 결과로 사내하청이 상당히 감소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이런 재벌대기업의 정규직화 운동 역시 계급적 단결과는 거리가 있다. 결과적

---

7) 정진호 외,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노동연구원, 2011.

8) 한편, 그렇다고 정부를 포함해서 학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직무급제를 한국에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식의 시장임금 기준의 직무급제이든, 독일식의 산별교섭을 통한 직무급제이든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당장 급여 수준의 공개는 물론이고, 초기업적인(사회적인) 직무평가도 이루어져있지 않다. 이러한 조건은 초기업 노사관계가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인사·경영에 대한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조건은 모두 한국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본 측도 이러한 조건을 마련해줄 의사가 없다. 노동조합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직무급제를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의 집단적 결정을 약화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는 시각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의 결론이 결국 기업별 연공급임금체계 사수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장기 침체기,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지금처럼 연공성이 매우 강한 임금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 어떤 임금체계든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노조가 계급적 연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낼 수 있을 것인지, 단순히 기존 체계의 방어에만 몰입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으로 재벌대기업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는 전체 한국 노동자 중 상위 10% 임금소득자를 약간 더 늘리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완성차 내부의 차별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노동자계급의 격차 완화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진짜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더 나아가서는 제조업 대기업과 민간 서비스부문 사이에 존재한다. 정규직화 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 노조의 혁신세력으로 조직되지도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완성차 사내하청 노조들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 더 많은 정규직화, 제대로 된 정규직화(신규채용 대신 경력인정, 불법 파견에 대한 사용자 법적 처벌 등)를 요구한다. 이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대기업 대마불사를 믿고 투쟁하는 정규직 노조와 유사하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대기업 케이블하청노동자, 현대모비스 사내하청 조직화도 2010년대의 대표적 성과다.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무노조 상징인 삼성에서 노조를 조직했다는 점에서, 케이블하청노조는 정규직 연대로 집단교섭을 이뤘다는 점에서, 현대모비스는 공급사슬의 핵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직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작지 않다. 이들은 정규직 따라잡기보다 초기업 노동조합 건설과 원청 사용자에 대한 투쟁을 시도했다.

셋째, 건설노조처럼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를 타고 조직이 확대된 곳도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침체를 부동산 경기로 완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4대강사업부터 신도시개발까지 부동산 개발이 크게 이뤄졌다. 이런 조건에서 건설노조는 현장 노동력 공급을 통제하면서 노동시장 경쟁을 완화했고, 조직화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이런 노동력 공급 통제는 불황기에는 호황기(확장기)와 다른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이 불황으로 돌아서면, 공급을 더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더 많은 노동자를 배제해야만 가능하다. 이주노동자나 다른 지역 노동자에 대한 배제가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공급통제 방식의 운동이 지속가능할지, 불황이 길어질수록 노조의 연대성과 계급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과제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들이 노동운동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1990년대 노동자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주역이었던 대기업 노조들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했고, 민주노총 건설로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현재 급격하게 확대된 비정규직 노조들은 피해자 정체성에 머무르고 있어, 전체 노동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즉 새로운 리더십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예로 지난해 조직된 “비정규직 그만쓰개, 비정규직 100인 대표자 투쟁”은 현재 비정규직 운동이 처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들은 완성차 사내하청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참여 조직의

현안 해결이 중심이 된 운동이자, 재벌·공기업 정규직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가 된 운동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운동으로 제시된 셈이다. 전체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더구나 노동운동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을 접어두고, 모든 것을 청와대가 해결하라는 식으로 운동하는 것도 문제였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자본을 압박하기 때문에 상대적 고임금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 일부만이 이 운동의 대상이 된다. 이런 운동으로는 재벌·공공부문의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넘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운동으로 나아갈 수 없다.

⑷ 어떤 다른 실천이 가능했을까

민주노총은 세계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드러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거시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주·객관적 조건이 있다. 무엇보다 노조운동 안에서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는 것이 정권과 자본의 노조 억압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정부는 경기침체를 근거로, 자본은 기업의 재무위기를 근거로 노조의 요구를 자주 거부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위기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은 대정부·대자본 투쟁을 약화시킨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 "경제위기론은 허구"라는 식으로 객관적 위기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노조는 경제위기를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 정부와 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경제위기 비판이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쉽게 치환된 이유다. 물론 노동자운동의 경제위기 비판은 정부와 자본의 대응과 당연히 달라야 한다. 하지만 위기 자체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인식이 없으면 제대로 된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주체적으로 다른 실천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주체적 대안이 가능했을까?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늦었더라도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보기 위해 검토해보자.

먼저, 당시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분석했다고 가정해보자. 민주노총은 경제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확충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했을 것이다. 자본가 혹은 민주당과는 다른, 노동자 계급의 국민경제의 대안을 마련하여야하기 때문이다.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인식하고 단기적·실리적·기업별 이해를 추구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늬만 산별"이 아니라 한 단계씩이라도 초기업 교섭·투쟁으로 발전해 가는 데 힘을 기울였을 것이다.

장기불황 시기에도 자본은 "성장의 종말"같은 낭만주의를 믿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윤분배율을 높여 이윤율 감소를 벌충하려고 나선다. 그래서 자본의 위기론은 노동조합과 임금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때 노조운동은 공세에 대해 방어적으로 각자도생을 추구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방어적 경제투쟁으로는 국민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없고, 결국 애초 방어하고자 했던 임금과 노동조건도 지킬 수 없다.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계층이 먼저 희생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민주노총의 대응도 달랐을 것이다.

경제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이해한다면 민주노총, 산별노조,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들은 자본의 경제위기 공세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서는 변혁적 실천을 조직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구조적 위기의 정세에서는 이전 같은 임금투쟁은 제한된다는 점,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가 임금 극대화를 계속 추구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대기업·공공부문 노조는 자신만 수혜를 얻는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 확대와 함께 하청·비정규직의 고용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민간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에 노조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들은 자신들의 교섭권을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에 집중하고, 기업 내 쟁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다. 비정규직 운동도 재벌·공공부문의 특수한 조건을 활용하여 정규직을 추격하는데 집중하기보다 더 많은 중소영세·민간부문에 확장될 수 있는 요구를 가장 중시하면서 투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조직화도 재벌·공공부문을 넘어 나아갔을 것이다. 기업 내 제한된 연공급을 넘어 2천만 노동자 모두의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노동표준을 만들어가는 투쟁에 민주노총, 산별노조가 힘을 쏟았다면 조직화와 계급적 단결에 다른 전망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국민경제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비판적 입장을 갖는 것은 정치·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진단이 다르면 대안도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명히 드러난 자본주의의 장기적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면 민주노총은 기업별 종신고용과 연공급 같은 호황기 일본 모델이나, 유럽에서 전후 호황기 가능했던 복지국가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를 지양하는 사회주의 역시 진지하게 대안의 하나로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럴 때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도 분명히 구분되는 노동자 계급의 입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체제변혁의 대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상당히 지적인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노력과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동자운동은 족벌경영이 싫다고 주주나 펀드에게 경영을 감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재벌 체제를 그냥 둘 수도 없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거대한 재벌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야한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경영과 생산, 산업에 관한

지식을 쌓고 개입해야한다. 저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는 못한 채 도덕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운동과는 달랐을 것이다(지금 민주노총의 흐름대로라면 별다른 근거 없이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 이상까지 계속 올리자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요인, 즉 국민경제의 조건과 노사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 임금소득 상위 15%에 속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단체협약과 투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살릴 수 있을지, 대기업-중소기업, 수출산업-내수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을 노동자가 주도하는 어떤 제도로 통제할 수 있을지 대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 시기를 거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금이다. 세계 자본주의와 한국 국민경제의 위기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 노동자운동이 기존의 기업별 경제주의적 운동을 넘어 노선을 전환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 상황이라는 점, 앞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 온 모든 경제적 조건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은 마르크스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주류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인정하고 대책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만약 노동조합이 기업 내에서 단기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면, 거시경제의 진단과 국민경제 붕괴의 위기에 애써 무관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주력인 재벌·공공부문 사업장에서는 임금과 고용안정을 상대적으로 쉽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성장기라는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은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지, 다시 전망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현상유지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노선의 변화는 '중장기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시급히 착수해야 할 과업이기도 하다.

노동자운동 혁신을 위한 제언

(1) 연대임금·연대고용을 위한 혁신

① 연대임금연대고용의 조건과 가능성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은 노동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산업예비군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존재하는 대규모 불안전취업자와 아예 노동시장에서 밀

려난 실업자들이 한국의 저임금, 임금 격차의 핵심이다.

한국의 여러 형태의 산업예비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취업자 숫자는 2700만 명이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0만 명, 자영업자가 600만 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00만 명이다. 그리고 실업자가 300만 명(고용보조지표2)이다. 물론, 이 수치를 가지고 한국에는 2700만 명의 취업자와 300만 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분석해서는 안 된다. 불안전취업의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불안전취업의 대표적 형태인 비정규직은 700만 명(근로형태별부가조사)이다. 여기에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취업보다 실업에 가까운 상태로 가정할 경우 약 400만 명이다. 100만 명에 달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에 대한 적극적 대안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불안전취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리하면, 300만 명의 실업자와 1200만 명의 불안전취업자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인구, 즉 마르크스가 말한 의미의 산업예비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산업예비군이 전체 노동인구 3000만 명의 절반에 달한다.

한편, 비정규직의 80%는 중소기업, 개인기업(자영업) 등 자본 규모와 자본집약도가 낮은 부분에 존재한다. 비정규직 비율은 개인기업이 48%에 이르며, 중소기업도 38%나 된다. 대기업의 경우 26%, 일반정부는 15%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중소기업, 개인기업의 고용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 고용은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의 전반적 저임금과 관련이 있다.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의 임금분포는 비정규직 차별이라기보다는, 전반적 저임금 구조에서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 영역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에 가깝다. 개인기업의 경우 60% 가까이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임금 수준이라 할 250만 원 이상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150만 원 미만이 35%, 250만 원 이상이 30% 정도다. 대기업의 경우 70% 가까이가 2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저임금 상태는 이들 부분이 대기업보다 생산성이 현격히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본주의 성장 역사는 자본 운동의 측면에서나, 노동 운동의 측면에서나, 자본 격차와 생산성 격차를 소수의 부와 소득을 극대화하는 데 이용해왔다.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화와 수출주도 성장, 1987년 노동자대투쟁, 200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 유연화를 거치며 생산성 격차와 임금 격차는 한국 경제에 굳어졌다.

그렇다면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를 대기업-공공부문에서 흡수할 수 있을까? 현황부터 보자.

현재 고용은 대기업 360만 명, 공공부문 240만 명 수준이다. 이 부분에서 얼마나 신

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까? 참고로 신규고용은 기존 일자리의 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로 대기업·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200만 명 존재하는데, 이들의 직고용이 일자리의 증가는 아니다.

2017년 말 대기업의 경상이익은 182조 원이다. 이 중 제조업 대기업이 124조 원으로 약 70%를 차지한다. 서비스업은 50조 원 안팎이다. 제조업 이익은 고도의 장비산업인 반도체, 석유화학이 절반을 차지한다. 서비스업은 역시 자본 집약적인 금융, 통신이 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곳에 이익이 집중되어 있다. 민간 부분에서 이익-고용은 절대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제조업 해외고용은 30대 기업집단이 약 20만 명, 연관된 중소중견기업이 1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해외공장 절반이 유턴해도 제조업 15만 명(제조업 440만 명의 3%) 증가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제조업 노동시간을 10% 감소시킬 경우 중하위 숙련 노동자가 300만 명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하면 30만 명 정도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타국과 비교해 봐도 지나치게 빠르게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정책도 수용은 가능할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는 240만 개다. 이중 행정·국방·치안 120만 개, 교육이 70만 개다. 피용자 보수로 보면 행정·국방·치안이 85조 원, 교육이 80조 원이다. 비생산적인 행정·국방·치안이나 인구감소로 더는 증원이 불필요한 교육은 일자리 확대에서 제외하자. 8만 명을 2조 원의 인건비로 운영하는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사회복지 지출이 매우 작으므로, 대략 4배 정도로 늘리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200만은 약간의 임금상승과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해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 시 전환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지원금으로 민간에서 운영 중인 보육(약 35만 명), 요양(40만 명) 등은 과감하게 완전 국영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자리 증가는 아니지만, 임금 격차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핵심은 빈곤의 침전지 역할을 하는 저임금 내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다른 영역으로 탈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제안들은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전시경제에서나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다.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정책이 약한 강도로 집행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취업자 수만 명을 이동시키는 수준으로 현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본축적 둔화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노동시장의 여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② 노조 운동의 혁신

구조적 위기 시대에 연대고용·연대임금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을 포기할 수도 없다. 연대고용·연대임금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노조 운동은 계급적 목표를 지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거시 경제적 목표는 불완전취업자와 실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고용 확대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 부분의 연대임금 정책이 중요하다. 연대고용에 친화적이며,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만들어야 한다.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모색, 급경사 임금커브로 인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연대임금 연대고용에 대한 고려 속에서 고임금 부문의 중단기적 임금인상률 조정, 실노동시간 단축 등 두 부분의 고용 비중 확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조들이 연대임금에 동참하려면, 임금 극대화를 계급적 수사로 치장해 온 전투적 경제주의와 의식적인 결별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교섭권을 산별노조와 총연맹에 실질적으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준하는 재정, 산업, 노동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목표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달성이 쉽지도 않거니와,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노동운동 내적 혁신의 동기가 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인구 절반을 배제한 상황에서 10% 조직 노동이 계급적 운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노동운동의 '귀족노조'화와 각자도생형 투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연대고용·연대임금은 가능/불가능을 떠나 노조 운동이 존재의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목표다.

⑵ 비정규직 운동의 방향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은 정부 정책의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한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전환 예외자를 최소화하고, 자회사 전환이 아니라 기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연공급 중심의 기존 정규직 임금체계에 편입되어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동시에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및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직무급제 반대 입장으로 저지하고, 정부의 재정투입을 대폭 확대하여 전환자 임금수준·임금체계를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은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정 간 협의기구 및 기관별 노·사·전문가위원회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여 전환 범위와 처우개선을 최대화하며, 기관별 교섭 과정에서 투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쟁을 매개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여론을 확대하고,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과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도입 시도를 저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투쟁이 실제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는데, 전환 결정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쳤고 대다수가 무기계약직과 유사한 조건으로 전환되었으며, 파견·용역의 다수는 자회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무기계약직 임금을 기존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등 기존 정규직 임금을 따라잡는 것을 추가 과제로 제시한다.

요컨대 정규직화 과정에서 임금 격차 해소는 공공부문 정규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없애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전환자가 기존 정규직의 임금수준·임금체계를 쟁취함으로써 이를 달성하는 것이 운동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재벌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조직된 비정규직 운동의 일반적인 경향, 즉 사업장별·부문별로 정규직 임금을 추격한다는 목표가 문재인 정권 정책에 대응하여 다시 나타난 것이다.

공공부문만을 시야에 놓고 차별 해소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기존 정규직의 임금수준·임금체계 쟁취를 목표로 하는 노선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한국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임금 격차 완화를 고려한다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개별기업 차원의 미시적 쟁점이 아니라 4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공공부문을 넘어서서 볼 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의 전략은 한국 사회 전반의 거시경제적 조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전체 비정규직 운동의 전략과 일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① 기관 내 차별 해소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의 초기업적 토대 구축인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전후로 한 정규직화 초기 국면에서 노동운동 진영의 주된 대응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에 미달하는 내용을 비판하고 가이드라인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기관별 협의 방식을 비판하고 정규직화 원칙 전반을 결정하는 노정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노정 교섭을 통해 달성하려는 내용이 기존 정규직 수준으로의 처우개선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요구였다.

그러나 한국 경제와 노동자 임금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 상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고,[9] 설사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민간부문으

9) 우선, 대기업·공공부문의 연공급이 한국에서 표준적인 임금체계였던 적이 없으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이를 쟁취하는 것은 비정규직 운동의 일반적인 과제가 될 수 없다는 점

로까지 확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요구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인식했다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를 일정하게 상대화하는 대신, 전환자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임금수준·임금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각 기관 내에서의 차별 해소에 집중하는 대신 공공부문 비정규직(전환자) 전반을 조직하는 초기업적 운동의 토대를 만드는 방향이다. 기관별 협의 방식을 비판하고 전환자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적 교섭으로 이어지는 데에도, 차후 민간부문 비정규직으로까지 운동의 범위를 넓히는 데에도 더 유리한 방향이었을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는 자회사 전환을 둘러싼 논의 지형 역시 달라졌을 수 있다.

실제 진행은 달랐다.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식적·비공식적 노정 교섭이 있었지만, 처우개선 요구가 일부 반영되는 것에 그쳤고, 정부는 기관별 협의 체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노동운동 진영은 기관별 투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이후 정부는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도입을 시도했는데, 노동운동 진영은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폐지를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표준임금체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기업별로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안을 관철해나갔다.

노동운동 진영이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대신 폐지를 요구했던 것은 정규직화 초기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화" 원칙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

을 지적해야 한다. 연공급이 확대되었던 1980년대 말에도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부문에서는 연공급이 도입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점차 무너졌다. 현재 연공급은 고용안정이 유지된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게다가 연공급의 토대가 되었던 고성장·인구증가라는 조건이 세계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반복되기 어렵다. 연공급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근속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체계로, 이는 전체 경제 차원에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한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유지될 때 지속 가능하지만,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하다.

또한 전환자 임금수준이 공공부문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은 전체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격차를 고려할 때 불가능하며, 공공부문에서조차도 실현가능성이 낮고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한국의 임금노동자는 2000만 명, 그중 비정규직은 821만 명이며, 그중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550만 명이다.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167만 원이고, 공공부문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452만 원이다. 전체 비정규직 임금을 공공부문 정규직 수준까지 인상하려면 국민경제에서 임금분이 연간 281조 원 증가해야 하며,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188조 원 증가해야 한다. 이는 경제 전체의 축소재생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하며, 이마저도 비정규직과 비슷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논외로 한 것이다. ②단순 계산으로 정규직 임금을 추격해야 한다고 간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5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공공부문 정규직 임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월 250만 원 정도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할 때 추가 소요 재정은 연간 16조 원 정도다. 공공부문 총임금의 10%를 상회하는 규모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조건이 이러하다면, 정부 재정 제약을 고려할 때 기존 정규직 임금수준과 유사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쟁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을 추격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임금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타당한 방안인가 하는 점이다. 전환자가 기존 정규직 임금체계에 그대로 편입되는 것은 공공부문만을 시야에 둘 경우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비슷한 일을 하는 민간부문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는 더 크게 확대된다.

기관별 협의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노동조합 조직 여부 및 투쟁력과 기관별 예산 수준에 따라 임금수준에 편차가 발생한 상황에서 폐지 외에 다른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는 시작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고 근속·숙련에 따른 인상 폭이 10~18%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낮은 등 문제가 많은 모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요구가 유일무이한 원칙이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노동조합이 정규직 전환 초기에 초기업적 임금체계를 요구하면서 쟁점을 선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전환자) 전체에 적용되는 임금체계 형성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② 총괄적 투쟁 전선 구축의 실패

차별 해소가 핵심 원칙이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정규직 전환 범위와 처우개선 정도, 협의 진행 상황이 기관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대신 전환 과정의 원칙만 제시하면서 기관별 협의에서 대부분 조건이 결정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 공공부문 고용정책 자체가 기관의 역사적 조건이나 예산 수준에 따라 개별화되어 있어 가이드라인 역시 기관별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노동운동 진영이 원칙으로 설정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역시 이러한 조건에 조응하는 것인데, 정규직 임금수준·임금체계가 기관별로 개별화된 상황에서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라는 원칙 역시 기관별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전환 대응과 투쟁이 각 산별노조 혹은 총연맹 수준에서의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 결과였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구체적 수준이 기관별로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이를 조율하여 총괄적 투쟁을 만들 방도를 찾기는 요원한 일이다. 결국 "기관별 기존 정규직을 목표로 최대한의 전환범위와 처우개선을 쟁취한다"라는 원칙만 남은 채 실제 투쟁은 각 단위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전환자 내부에서도 기관의 예산 여력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 여부에 따라, 정규직 노동조합의 입장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력에 따라 전환 범위와 처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전환자) 간 차별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비정규직(전환자)의 공동 요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야에서 운동을 만들어 나가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다.

노동운동의 주요한 경향이 사업장별 투쟁인 상황은 거시적 상황을 보기 어렵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는 미시적 실현 가능성이 과대평가된다. 지불 여력이 있는 자본, 단위별 노동조합의 투쟁력, 정세적 조건 등에 따라 미시적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형

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위별·부문별 실현 가능성이 모여서 거시적인 실현 가능성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운동이 거시경제적 조건, 장기적 관점에서 단결 확대의 방향, 공공부문 전체의 고용·임금전략, 민간부문 노동자와 연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③ 비정규직 운동, 협소한 목표를 넘어서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거나 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한국 사회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초기 문재인 정부 "노동 존중 사회"의 대표 정책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 역설적 공정성 논란을 통한 청년층의 반발을 거쳐 전환조건을 둘러싼 기관별·부문별 투쟁, 청와대를 향한 청원으로 귀결되고 있다.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비정규직이 조직되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 비정규직 운동의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운동 진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퇴행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규직 전환 의지 후퇴, "노동 존중 사회" 공약 파기, 소득주도성장 전략 폐기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주체적 조건과 자신의 전략·실천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 최대한의 투쟁을 했으나 역량이 부족했다는 평가 역시 가능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해왔던 투쟁을 더 열심히 투쟁해야 한다"는 관성적 의지주의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우리 자신의 전략과 실천이 옳았었는지, 한계적인 지점이 있었다면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천명했던 초기,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산별노조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의 초기업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 즉 기관별 협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초기업적 교섭을 요구하는 동시에 초기업 교섭의 요구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자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전환방식·임금체계 등의 포괄적 요구를 제시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규직화를 두고 투쟁하는 사업장들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위별·부문별 투쟁을 넘어서는 총괄적 운동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캠페인 및 법제도 개선 투쟁을 하는 데 더 집중했어야 했다. 협소화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을 확장하기 위한 실천을 지금이라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 형성된 비정규직 운동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동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토론1]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 전투적 경제주의를 넘어 총노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으로 -

강문식 |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1. 경제위기 분석에 대한 의견

- 우선 토대로서의 경제 위기 진단 대단히 중요.
- 저성장의 만성화, 저성장의 장기화 등이 현재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의 양태로 드러나고 있음. 상당기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고, 만성화된 저성장이 초래하는 (새롭지 않은)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폭로해야할 것임.
- 문제는 장기저성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느냐는 것임. 저성장의 장기화는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자본-노동 사이의 양극화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사이(ex.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자본계급 사이(ex. 대기업-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 확대)에서 양극화가 마찬가지로 확대되는 중. 국가 간 양극화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음.
- ‘최종적’ 위기로 표현되는 ‘붕괴론’의 정세적 함의를 잘 모르겠음. 2007-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세계 국가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높아진 것은 괄목할 지점임. 공황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동시에 과잉설비, 과잉자본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저성장이 더욱 만성화되는 결과를 초래. 이윤율 저하를 극복할 새로운 방책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최종적'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국면이 2020년대 이후까지 장기지속 될 수 있음. ‘최종적’ 위기로 표현되는 붕괴론이 가까운 시일 내 도래하는 어느 시점에서 증시·환율의 폭락(공황)을 넘어서는 문자 그대로 국민경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선 한국의 경제는 아르헨티나, 터키, 베네수엘라 등과 펀더멘탈에 큰 차이가 있어 단순 유비하기 어렵고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임. '최종적' 이라는 용어가 현실 운동에 유의미한 영향 미쳤는지 되돌아볼 필요.

- 이 글은 이윤율 저하에 따른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그 양태로서 장기 저성장(생산성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작성하였음.

2. 민주노총의 운동 평가

(1) 흔들리는 중심과 관성적 의제 제출

- 민주노총이 경제위기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 정세에 부응하는 총노동의 대응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동의함.
- 정부·민주당이 제기하는 소득(임금)주도성장론의 근본적 한계, 더구나 '임금주도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명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 민주노총은 별다른 비판을 제기하지 못했음. '재벌개혁론'은 민주당 류와 차별점을 형성하기 위해 채택을 강요당한 측면이 강함. 충분한 고민 없이 의제를 채택하다보니 민주노총의 재벌개혁론은 참여연대류의 주주자본주의론부터 사내유보금 환수론까지 이질적이고 병렬할 수 없는 주장이 종합되어 있음. 최저임금 1만원 의제가 채택된 과정도 돌이켜보면, 아나키즘·의지주의적 성향이 강한 (구)사회당계의 구호를 2015년 당시 집행부가 수용했던 것인데, 최저임금1만원 요구안 근거를 맞추려다 보니 해가 지날수록 근거가 형해화되는 결과 초래하기도 했음.[10]
- 가맹조직이 제기하는 의제 역시 화학적 총합이 아닌, 단순 나열의 관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음. 2018년 하반기 총파업의 경우에도 의제 나열에 더해, 총파업 선언 이후 총파업 의제가 수시로 바뀌거나 추가되는 촌극(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 ILO핵심협약 비준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보여줌. 이런 모습은 특히 이번 집행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지는데, 냉정히 따져보면 현장파가 집권했던 이전 집행부에서는 나열된 의제의 총합이 반박근혜 전선으로 귀결되면서 이러한 모습이 덜 드러났던 것임.

10)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기준을 지양하고, 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2.5인)의 '가족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아 아래와 같이 2016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산정한다. [...] 2016년에는 4~7분위 2인 가구 가계지출 평균 추정값이 약 220만원이라는 점을 최저임금 1만원의 근거로 들었고, 2017년에는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가 평균값 기준으로 월 2,707,573원~3,437,488원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2018년에는 아예 최저임금 요구 근거가 별도 발표되지 않았고,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가 지날수록 근거는 추상화되었고, 지양하겠한다던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다시 주장의 근거로 끌어왔다. - 「최저임금 1만원 투쟁, 무엇을 남겼는가」, 아래로부터 34호

- 각 가맹조직이 제출하는 의제들 사이에는 깊이 들어가면 서로 상충되는 의제도 적지 않음. 이런 상호 상충되는 의제에 마주했을 때 총연맹의 선택은 대개 기계적 중립이거나 각 당사자 간 해결이었음. 일례로, 2018년 공공병원 노사정TF에서 보건의료노조가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합의안을 내놓았고, 이 합의안에 공공운수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을 때 총연맹의 입장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함. 이는 발제문이 제기하는 쟁점인 임금체계와 밀접한데, 선도적인 제기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서도 총연맹의 안(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현 주소.
- 이는 총연맹뿐만 아니라 지역본부의 활동에서도 비슷하게 경험하는 현실임. 조직 간 입장을 조율해내는데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고, 처리하기 어려운 쟁점은 총연맹으로 떠넘겼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음. 어느 지역의 경우 지방정부와 이루어지는 노-정교섭의 안건이 각 가맹조직의 요구사항 나열로 구성된 사례도 있는데, 이를 노-정교섭으로 칭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현재 총연맹에서 이야기하는 대정부 교섭이라는 것도 이러한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

⑵ 준비되지 않은 정규직 전환 대응

- 명확한 좌표를 설정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크게 휘둘리고 있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이에 대한 대응 과정도 마찬가지.
- 우선, 문재인 정부의 전환정책에 대한 평가를 짧게 짚을 필요가 있음. 2017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1단계 정규직 전환이 완료됨. 2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기간제 현황을 집계해본 결과 총 48,303개월, 4,025명 분량의 업무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연중 상시 고용으로 볼 수 있는 12개월 근무자 숫자도 1,521명에 이름. 9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시지속 인원은 2017년 2,420명에서 2019년 2,448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음. 이들이 맡은 업무의 대부분은 청사관리, 시설관리, 미화, 조리, 시설운영 등 상시지속업무임.[11]
-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는 대규모의 기간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전환 정책에 큰 허점이 있음을 의미함. 입구 규제 없는, 현행 테두리에서의 전환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할 것임. 입구 규제 관련하여 '사업별'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문제임.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고용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사업의 지속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핑계를 들어 신규 채용이 계속되고 있

11)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현황 및 향후 과제」, 민주노총전북본부 이슈페이퍼2019-03

음. 사업의 실질은 동일해도 이름을 바꾸어 신규채용을 계속하기도 함. 이는 기간제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 사업별로 직종을 무수히 쪼개놓다 보니, 새로운 직무의 필요성이 생기면 기존 직종의 신규채용이 아닌, 신규사업 기간제를 신규채용하거나 아예 업무를 외주화시키고 있음. 각 직종별 직무에 상이점이 미미한 경우 다수임. 직종을 최소화하고 '일반직' 형태의 고용을 확대시켜가는 것이 부문 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일차적인 접근방법일 것임.

- 정부의 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축소시키지 못했음. 동시에 노동운동 역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충실한 이행("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며 기존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의 정규직전환에 매진했고, 발본적인 구조 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했음. 입구규제, 일반직 고용 확대와 같은 조치가 우선 이루어져야 했고,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임금체계 고안까지 필요함.
- 공공부문 고용구조에서 아래 계층의 임금을 현행 수준에 고정시키는 표준임금체계(직무급제)에는 큰 문제가 있음. 그러나 정부가 매년 노총과 표준임금체계의 임금협상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면(실질적 산별교섭)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고민을 해본 적 있음. 득이 클지 실이 클지(총연맹이 코퍼러티즘을 넘어 계급적 이해를 대표할 수 있을지, 그만한 정책적 능력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우려)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맞이하며 보다 큰 틀에서의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이 없던 것이 사실임. 최소한 민주노총에서는 당위적인 요구안 제출에 그칠 게 아니라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수반되는 각종 필요조치, 예산 등 구체적 현안까지 점검하고 전체 계급적 이해를 대표할 의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

(3) 대안형성과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체계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런 현실은 민주노총의 봉건적(시기로 따지자면 고려조?) 조직형태에서 총연맹이 갖는 어정쩡한 위상과 무관하지 않음. 숱하게 벌어지는 각종 조직 갈등 사례에서 총연맹의 조정력은 신통치 않음. 산별-민주노총 지역본부-총연맹 사이의 역할과 위상 역시 명확한 조직적 합의가 아닌 관례에 의존하고 있음.
- 민주노총이 총노동의 대표로서 입장을 제출해야한다는 비판과 동시에, 민주노총이 총노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하려면 어떠한 조직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필요함.

-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민주노총 창립 초부터 최근까지 끊이지 않았음.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2000), 조직혁신위원회(2005), 노동운동혁신위원회(2007), 등 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전략을 제출한바 있음. 2002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는, 2000년 현재 18개 산업별 연맹을 대산별 분류에 따라 조직 통합과 산별 노조 재편 운동을 통해 10개의 산별 연맹, 산별노조 병존 시대를 거쳐 8개의 대산별 노조, 장기적으로는 서너 개의 대규모 통합 산별 노조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방향으로 제시했었고, 2007년 산별특위에서 제시한 로드맵은 2007년 현재 15개 산별을 2009년까지 7개 산별, 2010년 이후 5개 대산별 체제로 재편하자는 것이었음. 최근에는 2018년 임시(정책)대의원대회에 전략토론 의제로 조직체계 혁신, 가맹조직 통합 추진 등이 제기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의제가 대의원대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음. 2002년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산별구획방안은 처리되지 않았고, 의무금 정률제 납부, 대산별 체제로 재편 등의 안건이 제출된 2007년 9월 임시대의원대회는 성원미달로 무산되었음. 가까이는 2018년 임시(정책)대의원대회 역시 성원미달로 무산되었음. 해당 대회가 무산된 배경을 조직혁신 과제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정파구도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도 상수로서 민주노총의 주체적 조건임.
- 산별구획은 구체성을 가진 내용이어서 예시로 들었지만, 총연맹의 역할과 기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각 산별과 지역본부-총연맹의 관계정립일 것임.
- 오랜 기간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상당함. 주장에 조직적 힘을 싣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제출되는 의제 역시 구체성을 사상하며 '조직체계 혁신', '가맹조직 통합 추진' 등의 표현으로 추상화된 것도 현실임.
- 노총은 정치적 역할을 하는 단위이나, 정당·사회단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보해야 하는 대중조직임. 노동운동의 과제로 총연맹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실질적 과제 – 예를 들어 노총에 교섭권/쟁의권 위임 방안, 사업장/조합원 명부 노총에서 집계, 의무금 정률제, 산별 구획 5개 이내로 조정, 일상적 조직/조합원 관리위한 산별 지역조직 완비 등 – 에 대한 제기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총-총지본의 대표성/지도력 확대해야 함. 이 중 몇 가지는 노총 직선제와 연동되는 쟁점인데, 직선제 자체에 대한 발본적 재평가를 수행하고 노총/산별의 역할 정립을 하는 방향이 더 낫겠으나 이는 앞서의 제안보다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함.
- 이는 발제문이 지적하는, 민주노총이 총노동을 대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상보적 차원으로, 동시적으로 수행되어야할 문제제기이자 조치라고 생각함.

2002년 (대의원대회 제출-미처리)

발전단계 / 산별분류	연맹	산별노조	대산별노조
제조업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제조업노조
	화학섬유연맹	화학섬유노조	
건설업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노조	건설산업노조
보건/사회복지업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공공사회서비스업	공공연맹	공공연맹	
사업관련서비스업	시설노련		
운수/창고업	택시.버스.화물	운수노조	
금융/보험업	사무금융노련	사무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교육서비스업	전교조..대학노조.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노조	교육노조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언론연맹	언론노조	언론노조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연맹	서비스노조	서비스노조

2005년 (조직혁신위 결정 및 중집 결정으로 현장토론 진행)

발전단계 / 산별분류	연맹		통합 산별연맹/ 산별노조
제조업	금속산업연맹		제조업연맹/ 제조산별노조(추)
	화학섬유연맹		
건설업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노조
사업관련서비스업	시설노련	과도기	공공운수산별노조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	공공연맹		
운수/창고업	택시.버스. 화물통합(준)		
금융/보험업	사무금융노련	2005년 하반기 ~ 2006년 상반기	민간사회서비스노조
보건/사회복지업	보건의료노조		
정보통신업	IT연맹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연맹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언론연맹		언론노조
교육서비스업	전교조.대학노조.비정규직교수노조.교수노조		교육노조
공무원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2007년 (산별특위)

<table>
<tr><th colspan="2">민주노총
가맹조직</th><th>2007~2008년</th><th>~2009년</th><th>2010년
이후</th><th>비고</th></tr>
<tr><td colspan="2">금속노조</td><td rowspan="2">제조업노조</td><td rowspan="2">제조업노조</td><td rowspan="4">제조대산별
노조
(최대규모:
488만명)</td><td rowspan="4">- 2008년 중
제조부문
공투본 구성</td></tr>
<tr><td>화섬연맹</td><td>화섬노조</td></tr>
<tr><td rowspan="3">건설연맹</td><td>건설
플랜트</td><td rowspan="2">건설노조</td><td rowspan="2">건설(통합)노조</td></tr>
<tr><td>건설노조</td></tr>
<tr><td>건설사무
노조</td><td colspan="2">건설사무노조 완성</td></tr>
<tr><td colspan="2">사무금융연맹</td><td colspan="2">사무금융노조 완성</td><td rowspan="3">민간서비스
노조 완성
(최대규모:
488만명)</td><td rowspan="3">- 2008년중
민간서비스부
문 공투본
구성</td></tr>
<tr><td colspan="2">서비스연맹</td><td colspan="2">서비스노조 완성</td></tr>
<tr><td colspan="2">IT연맹</td><td colspan="2">IT노조 완성</td></tr>
<tr><td rowspan="2">보건의료연맹</td><td rowspan="2">보건
의료
노조</td><td rowspan="2"></td><td rowspan="2">보건의료노조</td><td rowspan="5">공공운수노
조 완성
(최대규모:
395만명)</td><td rowspan="5">- 2008년중
공공부문
공투본 구성</td></tr>
<tr><td colspan="2">여성연맹</td></tr>
<tr><td rowspan="3">공공운수연맹</td><td>공공
서비스
노조</td><td rowspan="3">공공운수노조 통합</td><td rowspan="3">공공운수노조 완성</td></tr>
<tr><td>운수노조</td></tr>
<tr><td>연전노조</td></tr>
<tr><td colspan="2">전교조</td><td rowspan="4"><교육노조 준비위></td><td rowspan="4">교육노조</td><td rowspan="4">교육공무원
노조
(최대규모:
215만명)</td><td rowspan="4">- 2009년,
교육/공무원부
문 공투본으로
확대</td></tr>
<tr><td colspan="2">대학노조</td></tr>
<tr><td colspan="2">교수노조</td></tr>
<tr><td colspan="2">비정규
교수노조</td></tr>
<tr><td colspan="2">공무원노조</td><td colspan="2">공무원노조 / 유사조직 통합 추진</td><td>공무원노조</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언론노조</td><td colspan="2">언론노조 완성</td><td>언론노조</td></tr>
</table>

2. 조직화 평가

(1) 민주노총의 조직구성은 총노동을 대표하고 있나?
- 산업구조 변화와 조직구성 사이의 괴리 심화

- 고용 관련 통계를 확인하면,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 수의 절반을 넘음. 반면 2017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2%인데 반해 300명 이상 사업장 조직률은 57.3%. 정규직 과보호론 등은 노동계급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생산되는 담론이지만, 영세·비정규 노동자가 미조직되어 있는 현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이러한 조직률의 차이는 민간/공공부문에서도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음.

표 1.「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규모별	사업체수	총종사자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전규모	1,950,338	17,362,903	1,219,395	1,158,187	12,415,075	2,570,246
1~4인	1,200,656	3,213,847	867,026	220,848	1,507,733	618,240
5~9인	449,479	2,866,072	274,950	135,478	1,935,729	519,915
10~29인	220,099	3,421,150	68,094	257,947	2,656,103	439,006
30~49인	38,740	1,454,086	5,486	198,885	1,083,149	166,566
50~99인	24,861	1,691,736	2,837	162,335	1,321,761	204,803
100~199인	10,352	1,399,874	820	97,149	1,127,463	174,442
200~299인	2,793	670,310	125	30,955	545,731	93,499
300~499인	1,767	666,213	46	27,043	530,637	108,487
500~999인	1,053	718,834	10	20,282	586,262	112,280
1000인이상	538	1,260,781	1	7,265	1,120,507	133,008

표 2.「노동조합 조직현황」(2017), 고용노동부

구 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임금근로자 수	11,568,000	3,927,000	2,057,000	2,466,000
조합원 수	26,909	136,537	307,146	1,413,654
조직률	0.2	3.5	14.9	57.3

- 민주노총전북본부 20년사 정리 작업을 하면서 조직현황 집계를 한 바 있음.(미완임을 감안해줄 것을 당부함.)

- 민주노총전북본부 창립 후 조합원수는 1996년 11,670명에서 2015년 35,903명으로 20년 간 3배를 넘는 양적 성장(같은 기간 전라북도의 임금근로자 수는 1996년 44.7만 명에서 2015년 57.6만 명으로 증가)
- 조합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산별은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연맹 순임.
- 산업분류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공공행정, 제조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조합원 수가 증가했음. 공공행정 부문의 조합원 비중은 1996년 0.3%에서 2015년 15.9%로 대폭 증가함.
- 1996년~2015년 기간, 100인 이하·비정규직·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조합에서는 9,536명, 100인 이상 사업장, 전국단위 대기업·공공기관 등 노동조합에서는 14,697명의 조합원이 증가했음.
- 기간 100인 이하 사업장/조합원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평등지부, 일반노조 등)의 조합원이 대폭 증가했음.
-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 증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부문임(건설기계 2,175명, 플랜트 1,960명). 이외 화물연대(1,200명), 교육공무직(1,645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지역노조(평등지부, 일반노조) 등에서 조합원 수가 증가했음. 건설·화물, (교섭상대가 분명하고 고용안정성이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공무직·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을 제외하면 1,272명의 조합원 증가임. 이 중 지역단위 초기업노조인 평등지부·일반노조의 조합원이 711명임. 지역의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에서의 조합원 증가는 미미한 편임.
- 전라북도 산업분류별 종사자수와 조합원수 현황을 비교하면, 상당한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음. 제조업 부문은 전라북도 종사자 수 비중의 등락과 조합원 비중의 등락에 큰 차이가 없음.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 등 공공부문으로 종사자 비중은 13.8%인데, 조합원 수 비중은 33.4%임. 반면 도매 및 소매업(14.9%), 숙박 및 음식점업(10.5%) 등 도내 종사자수 비중이 높은 민간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조합원수 비중은 1.4%에 불과함. 조합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건설업 역시 도내 종사자수 비중은 5.8~6.5%로 큰 등락이 없음.

표 3.「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현황」,「전라북도사업체조사」

연도별	1996			2006			2015		
산업분류별(10차)	조합원 수	조합원 수 비중	전라북도 종사자 수 비중	조합원 수	조합원 수 비중	전라북도 종사자 수 비중	조합원 수 비중	조합원 수 비중	전라북도 종사자 수 비중
제조업	4,032	**34.6% (1)**	**20.5% (1)**	7,519	**28.6% (1)**	**17.0% (1)**	9,210	**25.7% (1)**	**18.0%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	0.0%	0.5%	97	0.4%	0.5%	128	0.4%	0.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	0.0%		0	0.0%	0.5%	43	0.1%	0.6%
건설업	0	0.0%	6.3%	800	3.0%	5.8%	4,656	13.0%	6.5%
도매 및 소매업	545	4.7%	**17.7% (2)**	549	2.1%	**16.8% (2)**	506	1.4%	**14.9% (2)**
운수 및 창고업	33	0.3%	5.3%	1,198	4.6%	5.1%	2,598	7.2%	4.8%
숙박 및 음식점업	0	0.0%	**10.8% (3)**	16	0.1%	**11.1% (3)**	0	0.0%	**10.5% (3)**
정보통신업	3,128	**26.8% (2)**	1.1%	1,601	6.1%	1.6%	138	0.4%	1.1%
금융 및 보험업	465	4.0%	6.1%	1,891	7.2%	4.4%	1,825	5.1%	3.8%
부동산업	0	0.0%	1.6%	30	0.1%	1.9%	41	0.1%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8	1.1%		290	1.1%	1.6%	432	1.2%	2.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	0.0%	1.9%	50	0.2%	2.1%	80	0.2%	3.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0	0.3%	6.4%	3,425	**13.0% (3)**	5.6%	5,711	**15.9% (3)**	4.7%
교육 서비스업	511	4.4%	8.4%	5,551	**21.1% (2)**	10.1%	6,300	**17.5% (2)**	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53	**21.9% (3)**	3.6%	2,578	9.8%	6.9%	2,896	8.1%	9.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	0.0%	1.7%	236	0.9%	1.9%	302	0.8%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5	2.0%	7.2%	256	1.0%	6.4%	294	0.8%	5.4%

(*「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현황」은 10차 표준산업분류로 분류하였고,「전라북도사업체조사」1996년~2005년 통계는 8차 표준산업분류, 2006~2016년 통계는 9차 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고 있음.)

사업장 규모별 조합원 수 (교섭단위 분리 여부로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0인 미만 사업장	182	156	238	242	277	294	256	86	136	91	160	212	239	240	192	180	181	173	234	259
50~100인 사업장	412	593	755	593	625	886	949	635	699	597	586	607	513	248	338	349	620	641	625	421
100~300인 사업장	1,313	1,625	1,405	1,646	1,997	1,945	1,727	1,733	1,787	1,761	1,916	2,002	2,040	1,566	2,518	2,553	2,240	2,329	2,376	2,041
300인 초과 사업장	2,943	2,848	2,990	4,021	4,045	4,082	4,082	3,646	3,696	3,588	3,867	4,100	4,198	4,450	4,350	4,580	4,338	4,411	4,321	4,432
초기업단위,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	0	0	0	1,203	1,622	1,604	1,916	2,797	3,364	3,829	3,379	4,230	4,326	3,350	7,274	8,631	8,113	9,965	10,237	10,634
네트워크 사업장, 초기업단위-공공기관 등	6,820	6,959	6,520	12,348	13,576	12,114	12,140	10,180	14,122	15,684	16,411	16,160	16,123	14,204	15,730	15,312	15,521	16,327	16,023	18,116

⑵ 공공부문 중심 노총이 되어가는 배경

- 공공부문에서의 괄목한 조직확대는 정규·비정규직 구분을 막론함. 민간 비정규·영세사업장에서 조직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조직가입의 부재가 아니라 가입조직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었음. 연도별 사업장 현황이 집계되어 있는 전북평등지부의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여 년 간 매년 신규조직의 가입과 탈퇴가 비슷한 규모로 반복되고 있음. 전북본부 전체로 따져도, 1996~2015년 간 가입했던 283개의 사업장/지회/분회 단위 중 조합 유지 기간이 2년 미만인 단위는 63개로 22%에 달함. 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탈퇴를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임.

- 그간 숱한 조직사업의 부침과 성패를 겪으며, 조직사업에 나설 때 조직된 후 조합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이 사실.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지불여력이 있고 사회적 여론에 많은 압력을 받는 공공부문에 집중하게 된 것도 필연적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이명박 정부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마다 여러 형태의 보호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음. 앞서 언급한 전북평등지부 역시, 그나마도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던 사업장의 대부분은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민간위탁이거나, 정부/지방정부의 개입이 미약하게라도 이루어지는 사업장이었음. 공공부문은 조직된 후 최초 임단협을 체결하고 나면(여기까지가 힘든 경우가 많지만) 민간영역에 비해 노동조건·처우가 빠른 속도로 상향되었음.
- 이들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긴 했으나, 신분제 폐지 투쟁이기보다는 신분상승 투쟁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때가 많았음. 완성차업체 사내하청의 경우도 의도는 그러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내용은 신분상승 투쟁으로 귀결되었음.[12)]
- 조직이 될 만한 곳을 집중해서 조직한다는 전략은 어쨌든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런데 여기에 몰두하는 것이 전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지 짚어봐야 함. 총연맹에 총노동을 대표하는 전략이 부재했다는 반성의 연장선상임.

⑶ 다시 지역노조

12) 약간 결은 다르지만, 완성차 사업장의 한 현장파 활동가에게 공단조직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자, 그 대답으로 당면 주요 의제의 첫 번째는 통상임금 두 번째는 사내하청 정규직전환이라 말하던 게 기억에 남음.

- ‘조직이 될 만한 곳’ 바깥의 노동자까지를 대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질문 던져야 함.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혹은 파견업체 노동자가 가입상담 했을 때 이들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은 어디인가? 안타깝게도, 돌려보내거나 법적 절차 안내로 상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 현실적 이유로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을 조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서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구호가 무색.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의 실효성도 상당히 퇴색되었다고 판단함. 정규직/비정규직 통계의 맹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냉정히 현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무리해서 단순 비교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어느 편이 안정성/노동조건이 나을까.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갇히지 않고 노동시장 전반을 면밀히 살펴야 총노동에서의 격차해소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임. 정규직,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조합 있음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가 전체의 7.6%였다는 연구도 시사점 있음. 구분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달라질 것임.
- 공단조직사업 등 기존의 시도 대부분은 철저한 실패·패배의 역사였지만, 노총은 이를 감안하고서도 지역 단위의 초기업노조 조직 사업에 착목하고 지역노동정책에 개입해야 할 것임. 실태조사, 조직사업, 이슈파이팅 등에 병행해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해야 함.
- 영세사업장 조직은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함.

- 쟁점 하나를 덧붙이면, 공공운수노조는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의 각 업종본부를 강화하고 기존 업종협의회는 업종본부로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미래 조직발전방향 안건을 통과시켰음.[13] 업종본부가 갖는 조직, 교섭, 쟁의 여러 측면의 이점이 있으리라 짐작함.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산별로 전환할 당시(2006년) 공공연맹의 결정사항은 조직의 골간을 지역과 업종본부를 병렬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역본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음. 이번 공공운수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은 산별노조 추진 당시의 고민과는 방향을 큰 각도로 전환한 것임. 이렇게 업종본부(소산별) 체계로 전환했을 때 지역노조, 지역본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를 들어본 바 없음. 민주노총의 지역본부가 자신의 조합원이 없는 가맹조직의 연맹체로서 갖는 한계를 산별노조 지역본부도 맞닥뜨리게 될 것임. 당장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도 업종조직으로 편재가 이루어지면 지역노조에서 조직사업에 나서기도 쉽지 않음.[14]

13) 이런 결정의 연장선상으로 업종본부의 하나로 버스본부 재건이 추진되었고 있음.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산하 전북버스지부도 버스본부로의 전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됨.

3.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1) 연대고용·연대임금에 대한 의견

- 발제문을 이해하기로는, '핵심은 내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다른 영역으로 탈출시키는 것', 그래서 노조운동의 거시 경제적 목표는 '대기업-공공부문에서 고용확대'(연대고용)이고, 연대임금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본인 식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SSM의 진출을 골목상권 침해로 비난하기보다, 직영SSM 출점을 강제하고 노동표준을 확립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음.
- 그러나 연대임금의 현실성 이전에, 대기업-공공부문에서 고용확대가 어느 수준으로 가능할지가 관건. 발제문에서 제시한 제조업 45만(유턴 15만, 노동시간 단축 30만), 공공부문 100만(사회복지 24만, 보육 35만, 요양 40만), 간접고용 200만은 총 취업자의 1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 여기에서 일부만 현실화 되어도 큰 의미가 있을 것.
-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기업이 고정비용 증가를 택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음. 삼성전자서비스, LG전자 등의 사례처럼, 외주화 된 사업을 원청 법인 내 계열화하는 것 역시 호황기가 아닌 불황기에는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선택. 한 기업이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스웨덴 모델 역시 한국의 현실과 거리가 상당함.
- 공공부문은 조세·재정정책 등 이용하면 민간에 비해서 더 여력 있겠지만 한계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다만 현 정부의 보조금 투하식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 직고용으로 방향 선회 필요.)
- 대기업-공공부문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의 총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실업기간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모색에 보다 착목해야하지 않을까. 한 사업장에서의 종신 고용을 전제로 한 각종 정책요구는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 최근 있었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으로의 전직은 하나의 참고사례. 보다 확대된 형태의 일자리 콘소시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14) 일각에서는 지역에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어 전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산별단체교섭에 진척이 없다고 진단(산별노조운동 '지역'엔 답이 없다, 윤효원)하지만 산별교섭제도의 형식과 효력조차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책임을 연목구어 하는 관점이다. - 「공공운수노조 2019년 대의원대회 미래 조직발전방향 안건에 부쳐」, 아래로부터 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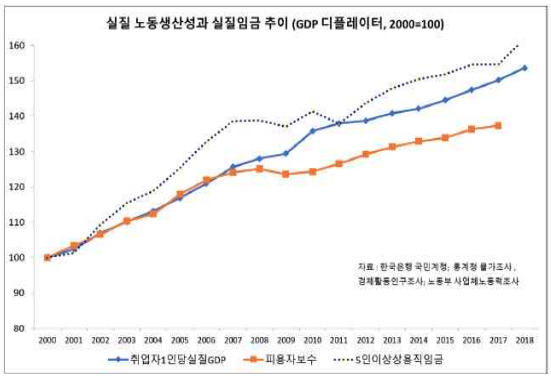
- 노동운동이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전투적 경제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데 동의.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함'에 대해 많은 고민이 듬. 공공기관 정규직, 혹 20~30대에서 제기하는 '공정함'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대(수입, 안정성, 사회적 지위 등)를 보장하라는 의미였음. 20~30대/정규직의 '공정함'에 대한 요구는 임금을 (요소생산성이니 한계수입생산이니 하는) 생산성과의 연계에서도 분리시키고 신분에 따른 지대요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경제학에 미달하는 봉건적 관념에 더 근접함.
- 설사 자신은 그 지대를 획득할 가능성과 거리가 멀다 해도, 노력에 대한 보상이 지대수입의 차등으로 귀결되는 것을 공정함이라고 일컫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임. 세간에 회자되는 '건물주님' 등등의 표현에서 엿 볼 수 있듯, 불로소득/지대수입 추구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으며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되었음. 경제위기에 조응하는 현상이라고 짐작함.
- 임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는 매우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전장임. 솔직히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건 없지만 노동계급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전취할 수 있는 임금체계가 있다면 이를 전격적으로 제안해야할 시기. 현재 시기에는 임금에서 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전선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배당금, 부동산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 중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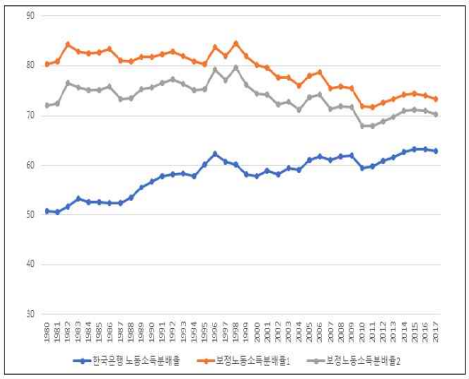
- 생산성과 임금 관련하여 하나 짚을 것이 있음. 노동생산성과 임금률의 비율(임금분배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고 있음. 노동생산성의 상승에 미달하는 임금 상승은 목도하는 현실임.
- 박정수(2019)[15]는 실질임금(5인 이상 상용근로자 임금)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하여 '노동의 산출탄력성이 변하지 않으면 노동생산성과 임금은 같은 비율로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이 지켜지고 있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주상영·전수민(2019)[16], 김유선(2019)[17], 이강국(2019) 등은 해당 연구가 '노동생산성을 계산할 때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을 들어 2000년 이후 임금과 노동생산성 사이의 괴리가 실재함을 증명하였음. 이강국은 추가로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이 1997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였고 순노동생산성-임금 사이의 괴리를 반영한다고 지적함. 이외 홍민기(201

15)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한국경제포럼, 2019
16) 「한국 경제의 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통계해석 논란에 대한 견해」,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2019
17)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5)[18]는 하위 90% 노동자들의 평균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괴리가 더욱 크다는 점을 지적함. 요약하면, 박정수의 주장으로 논쟁이 시작되었으나, 임금과 노동생산성 사이의 괴리가 실증되는 것으로 귀결.[19]

그림 2. (좌)김유선(2019), (우)이강국(2019)





- 연대임금 관련하여,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급제 도입, 혹은 이와 비슷한 임금체계가 주요한 선택지로 제기되고 있음.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확대하는 데에, 기존의 연공급제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가 아니라는 데에 우선 공감함. 민간 역시 아래에서부터 연공급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가는 것이 현실.
-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이라는 직무급이 취지대로만 적용된다면 지대로서의 임금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 그러나, 직무의 구분이 지식노동/육체노동의 분할, 직업의 귀천으로 고착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그간 추진된 여러 노동개혁과 같이 또다시 하위 분위 노동자 계층의 임금을 하향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전자와 관련하여 직무간 임금 격차를 일정 비율 이하로 강제하는 조치 필요. 후자의 지점에서 공공기관·재벌 노동조합의 입장과 역할이 중요할 텐데, 이들에게 당장 실질임금 삭감 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미래 소득에 대한 일정 양보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기 이전에, 최소한 그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조세부담 강화, 사회보장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노동계급 전체로서도 후퇴한 임금분배율의 회복을 최소한의 달성과제로 삼는 것 필요.

18) 「최상위 임금 비중의 장기 추세」, 산업노동연구, 2015

19) 이상의 논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소득에 대한 처리였음. 자영업자 소득을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산은 여러 곤란이 있지만, 자영업자 소득성장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저체되었음은 분명함.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노동력 저수지 역할을 하는 빈곤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운동의 입장 정립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임.

(2) 산업구조에 대한 대안 보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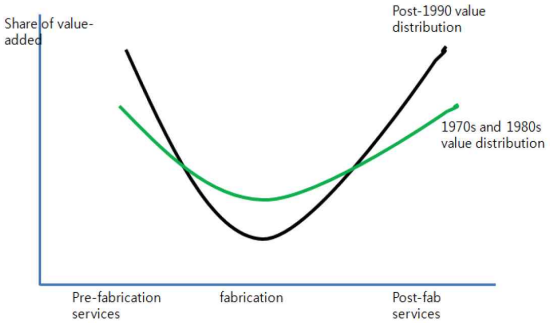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노동생산성 격차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음.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의 원인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수탈적) 가치 이전을 고려해야 함. 대기업 · 재벌 노동조합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이에 대한 계급적 대응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20]

- 보충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시했던 대안 중 하나는 하청업체 · 가맹점주가 원청·본사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음. 제도 시행 발표 후 수개월 후,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하청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때 94%의 원청이 이를 수용했다며 불공정거래가 개선되었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음. 가당찮은 주장이지만,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던 노동운동 진영에서 정작 이런 제도적 방안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점임. 이러한 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해당 정책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질의서라도 보낸 단체는 참여연대였는데, 씁쓸할 따름.

(3) 무엇이 좌익인가?

- 이상의 쟁점들은 노중기(2018)[21]가 제기했던 비판 - '전투적 조합주의는 수세기의 방어적 전투적 경제주의로 전락', '계급적 연대정신이 매우 취약'. ''고공농성투쟁'이나 '거리투쟁'이 모든 상황을 정당화하는 투쟁만능주의도 심각한 상황', '투쟁성의 실체적 내용을 모두 상실한 채 전투적 투쟁의 양태만을 높이 평가하는 잘못

20) 또 다른 예로 최근 글로벌가치사슬(GVC)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소위 스마일곡선은 생산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타 부문이 분배받는 몫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이런 산업 부문별 분배의 차이는 꼭 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에 비례하는 것도 아님.



21) 「1987년 민주항쟁 30년, 민주노조운동의 평가와 전망」, 산업노동연구, 2018

된 관행'. 수세기에 민주노조운동의 '중소영세노동자나 비정규노동자로의 노동계급 연대의 확장 곧 산별노조의 건설', '계급적 정치의식의 확보와 진보정당 건설' 등 대항헤게모니 프로젝트 실패 등 – 에 상응하는 부분이 많음.

- 노동운동 내 좌익과 우익의 대립구도가 '전투적 경제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 사이에 형성되고 있음.
- 노동운동 좌익 세력의 한 편에는 최저임금1만원·기본소득론 등으로 표현되는, 과학적 비판 없이 감정 호소에 의존하는 아나키즘·의지주의 경향의 운동이 약진했음. 다른 한편에는 '사내유보금 환수', '재벌해체' 등을 내세우며 현장에서는 강경한 언어를 경쟁하는, '조반유리(造反有理)' 식의 생디칼리즘 경향 운동이 약진했음.
- 현 대립구도의 좌(아나키즘, 생디칼리즘)·우(코퍼러티즘) 어느 쪽도 노동자계급의 대안이기 어려움.
- 정세분석과 그에 따른 과제 모색을 뒤로 미루고 '투쟁 속에 답이 있다'는 관성적인 구호로 대체하는 것이 좌파의 정체성일 수는 없음. 한 해 수차례의 총파업을 선언하지만, 무엇을 위한 총파업인지 조차 확립하지 못하는 현실은 노동운동 내 좌파 세력에게도 큰 책임이 있음.
- 민주노총은 총노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위상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총연맹의 조직체계를 갖추는 과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의되어야 함. 이와 동시에 전체 경제구조에 대한 세밀한 대안을 형성해 가야할 것.

[토론2]

틀을 깨뜨리는 고민과 활동이 필요하다

서보람 |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

1. “한국 노동자운동의 지난 10년 주요 쟁점” 에 대한 의견

- ①경제위기 하 노동조합 운동(민주노총)이 반(反)보수 전선과 함께하면서 경제위기 시기 ‘진정한 노동자들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민주당 세력(소득주도성장론)과 정책적으로 큰 차이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②그 과정에서 경제위기 하에서 그나마 안정적일 수 있었던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조합, 2000년대 이후 새롭게 조직된 노동조합들이 단기적, 방어적 투쟁에 집중하면서 경제주의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③더욱이 이 과정에서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자 간 단결의 확대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기업별로 각자도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함.
- 우리가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경향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노동운동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일 것임.

2. 노동자운동 혁신을 위한 고민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정규직 등의 쟁점을 발제가 다루고 있는 바, 이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고민을 제기하고자 함. 고민을 하는데 있어서, 나아가 노동운동에게 질문하는 지점은 이것임. **더 많은 노동자들을 함께 모아내고 싸울 수 있는 구호/전략은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자본이 구획해놓은 구분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효과와 문재인 정권 초기 노조에 대한 우호적 인식의 확대로 최근 2년 동안 급격하게 조직이 확대되었음. 현 시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운동, 더 나아가 전체 노동운동이 고민해야 할 과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보임.

(1) 누구와 만나야 하는가?

- 공공운수노조의 확대에 있어서 높은 비중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가능했던 대상자들이 차지하고 있음. 반면, 전략조직화 대상이었던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등)의 조직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비했음.
- 현재 노동운동의 주류세력(?)이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이고 2000년 이후 가입된 조직들 중 큰 비중 역시 대기업·공공부문의 비정규직임을 보았을 때,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자임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방어적 투쟁'에 집중하는 형태의 투쟁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지역적, 업종별로 모아내고 함께 조직하기 위한 고민과 적극적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음. 노동조합 역시 큰 규모, 큰 세력을 포함하는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여론, 사업장 및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클 수밖에 없음. 이는 비정규직 조직화 및 투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음. 노동조합 역시 조직화를 하는데 있어서 성과(그 중에서도 양적 성장 또는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고려하여 대상들을 선정한 면도 존재함. 문제는 현재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거나 영세하고 중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임. 양적 확대를 넘어서 조직화 사업에 더 많은 투자와 역량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음.
- 더불어 조직화에 있어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형태'로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조직할 것인지가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되고 정리될 필요가 있음.

(2) 양적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으로

- 조직의 양적확대를 넘어서 어떻게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정규직 간 단결을 강화하고 질적으로 통합적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현재 공공운수노

조는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비정규직 대표자회의를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여부 및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투쟁을 위한 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더불어 최근에는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투쟁, 중앙행정기관 처우개선 투쟁,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등에서 타산별 노조와의 공동파업이나 투쟁 역시 진행하고 있음. 공공기관은 별도로 인원확충과 노정교섭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준비 중임. 여기서 고민해볼 지점은 지금까지 함께 투쟁해왔던 노동자들이 민간영역/공공부문으로 나눠지면서 민간 영역 노동자와 공공기관·정부기관 노동자 사이에 임금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시간이 갈수록 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점임.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비정규직 간 연대는 어떻게 확대해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함께 싸워갈 것인가에 구체적은 그림이 있어야 함. 또한 비정규직-정규직 간(노동자 전체의) 단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되어야 함. 관련하여 노조 차원에서는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사고해야 할 지점은 좀 더 넓은 단결과 연대가 가능한 구상일 것임. 한국의 노동운동이 기업별 구조에 대부분 익숙하기 때문에 산업별 구조이든 총연맹 차원이든 공동의 투쟁 요구안을 가지고 집중점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기업별 형태의 교섭과 투쟁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기업을 넘어서서 어떤 방식으로 묶을 것인지는 쟁점이지만(지역별, 업종별, 직무별, 직종별, 고용 형태별 등) 더 큰 단결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상이 필요할 것임. 조직형태, 교육, 요구안의 통일과 공동투쟁의 기획.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구안에 대한 토론강화와 시야 확대 등.

(3) 임금에 대한 고민들

- 한편,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 전환 여부와 함께 사업장 내 임금격차에 대해 차별해소라는 이름으로 많은 투쟁이 전개되고 있음.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나 공공운수노조 역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 외에 별다른 구체적 안이 존재하지 않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관인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모두 기존부터 직무급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고, 공무원과 별도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었음. 예를 들어, 교육공무직은 이미 보수표1, 보수표2로 분류된 임금형태가 존재하며 직종별로 수당 여부 등에도 차이가 있음. 중앙행정기관은 현재 소속기관별, 과별 임금체계가 제각각인 상황임. 지자체 역시도 단일호봉제 보다는 몇 그룹(업무 성격에 따라)으로 구분하여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음. (여기서 오히려 쟁점은 '무엇을 기준으

로 직무급적 요소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만들었는가', '그것이 유효한가'일 것임. 학력, 자격증 유무, 위험정도, 노동 강도, 시중노임단가 등 무엇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우리 역시 항상 고민에 빠짐.)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다른 무기계약직이 기존에 존재했거나 신설되면서 새로운 임금테이블이 추가되거나 만들어진 기관이 많음. 특히 용역,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경우가 그러함. 이 과정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듯 임금인상이 상당히 일어난 경우 민간과의 격차가 확대되고(지역지부 등 노동조합 내에서 공동투쟁을 했던 곳 역시 이질감이 발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 내 격차가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함. 진정한 의미의 비정규직 철폐는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경우, 임금 수준이 노동자 임금 상위 15%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만 정규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공무직(무기계약직)은 다 비정규직인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정규직 대비 80%정도의 임금을 받거나 그 이상을 받으면 정규직인가. 정규직에 적합한 임금은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음.

- 직무급제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경제위기 하 적절한 임금체계와 노동자 간 상당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이 하나의 그룹임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대안과 고민이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 간 등 노동자 간 괴리와 갈등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음.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주장하는 성과직무급제는 당연히 반대해야 하겠지만, '호봉제는 무조건 옳고 직무급제는 무조건 나빠'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적절한 수준과 형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 과정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어야 함. 현재 호봉제가 한국 노동자들의 표준적인 임금체계가 아니라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더욱이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노동자 간 임금차이가 사실상 투쟁의 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재정상황 및 기관장의 성향, 정부의 기관에 대한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역시 전국적 기준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함. 한국사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냐보다는 어떤 기업에서 전환되었냐가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상당수 결정함.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어떤 기관에서 일하냐는 것은 현재 노동자들 간의 사회적 계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더 많은 임금과 복지시스템을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기업이란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소수에 속하고 이러한 일자리는 더 많은 경쟁구조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에 해당함. 이러한 조건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 취준생,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사회

적으로 지지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어쩌면 한국사회 노동시장의 분화가 고착화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함. 물론 기관별 임금격차는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금까지 기간 내 동일한 임금체계를 강조하면서 '상향평준화'를 외쳐왔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경제위기 하 이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구체화되어야 할 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 또한 공공부문의 투쟁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그나마 지불능력이 있는 기관(오래전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정책을 방어해왔던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사이에 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자 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 커질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함. 모두가 만족할 안을 나열하고 투쟁한다고 실제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제출되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한편, 우리가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알아서 정부나 기업들이 해법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형태의 무책임한 태도로는 노동자의 대안을 만들어갈 수 없으며 노동자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민주노총의 구호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함. 노동조합이 국가, 기업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지식과 구상이 없다면 노동조합은 계속적으로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음. 경제위기는 자본의 위기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위기이며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앞으로 우리의 행보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음. 즉, 노동조합은 오히려 경제상황을 포함하여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을 획득해야 함. 이 과정에서 "자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자 계급의 종국적 해방을 위한, 말하자면 임금 제도의 궁극적 철폐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패한다."는 마르크스의 말을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사실상 현재의 많은 투쟁이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구호 속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공공부문·대기업 내에서 기업별 신분상승, 임금인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고민해 봐야 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거시적, 장기적 시야와 이해가 필요할 것임.
- 노동조합 운동에서 '임금인상'이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고, 임금은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절대 하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역시 사실임. 또한 조합원 들뿐만 아니라 간부들 중에서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비트코인 등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시도들을 하는 경우도 있음. 현재의 노동운동이 '자본가처럼 부자되기', '노동자 중 상위 15%로 올라가기'를 위한 것은 아닌지 노동자들의 단결강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대안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구상 속에서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를 잘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함. 또한 취업자-취업자, 취업자-실업자 간의 경쟁

을 강화하는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굴레를 끊어내자는 투쟁의 목표를 좀 더 예각화하고 구체화해가야 할 것임. 투쟁하다보면 길이 열리고, 모든 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는 식의 순진한 발상으로는 자본주의가 유포하고 있는 논리 속에서 노동조합 역시 '성과'와 '돈'이라는 굴레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음.

- 한편, 비정규직이라고 지칭되는 많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임금격차가 상당함. 같은 공공부문이라고 해도 기관에 따라 호봉제부터 최저임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본급 체계와 수당체계를 가지고 있음. 복리후생이나 휴직, 휴가와 같은 복무규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이들의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만큼이나 상당하기도 함.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분류 역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토론3]

민주노조운동의 지금, 그리고 숙제

장석원 | 금속노조 기획부장

노동운동은 길을 잃었다

조합원이 늘어나고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운동이 성장하고 있으나 이는 온전히 조직노동운동의 성과가 아니다. 대중의 자발성과 노동계급이 처한 사회경제 조건의 악화가 만든 결과다. 다시 말해 계급투쟁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으나 민주노총으로 뭉친 민주노조운동은 전선에서 비켜서 있다.
21세기의 첫 20년을 채워가는 지금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어용과 자본에 맞서 노동의 권리를 지키는 힘으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체 노동계급의 일반이익을 방어하거나 제기하지 못한 채 조직노동자의 이익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기업의 울타리에 갇혀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조직이지만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 반성이 없는 운동은 어느새 관성만이 남아 오래된 습관 같은 투쟁을 매년 재생하고 있다. 그리고 꾸준히 후퇴하고 있다.

압축성장 국가와 운동

한국은 고도성장을 통해 단기간에 자본주의 중심국가에 진입했다.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압축성장이다. 우리는 서구가 만든 매뉴얼을 건너뛰며 서구를 따라잡고 추월했다. 발전하고 부유한 한국의 자본주의는 그래서 일반적이며 동시에 기형적이다. 경제 성장에 사회의 모든 가치와 자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과 비대칭이 한국사회 모순의 토대를 이룬다.

불행하게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운동도 압축성장해야만 했다. 특히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모순이 커가는 것에 대응하며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 뒤늦은 폭발로 시작한 노동운동은 이념과 조직을 착실하게 키우기보다 모든 힘을 조직을 지키는데 쏟아 부어야 했다. 그 결과 노동운동은 한국 자본주의 구조를 추월해 이를 개혁할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배자들이 만드는 사회경제 현실에 끌려 다니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의 노동운동은 사회문제보다 뒤처진 채 자본에 압도당하고 있다.

이념과 전략의 상실

노동운동이 전진을 멈추고 표류하기 시작한 것은 시기상으로는 2000년대 후반, 내용적으로는 운동의 이념과 전략목표를 상실하면서부터이다. 87년 대투쟁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민주노조운동은 “평등사회/노동해방”을 이념으로 삼았다. 평등사회는 낮은 수준의 사회주의 지향을 의미하며 노동해방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전복을 통한 해방이라는 보다 높은 수준을 의미했다. 말하자면 민주노조운동은 스스로가 반자본주의 운동임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노총, 「노동운동발전전략보고서(2000년)」 중,

○ 민주노총의 이념지향

①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어 노동하는 인간이 주인되는 “평등사회”임.

②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가치를 창출 하는 다수의 소외와 억압 위에서 소수의 지배자만이 풍요를 누리는 모순된 사회임.

③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등을 실현하여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이 보장된 사회임. 또한, 성의 평등, 생태적 조화,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높은 가치들을 실현하는 사회임.

④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대안사회들에 대한 시도들은 현실 세계에서 실패로 끝나거나 자본주의 세계체제 아래에서 적대적 여건 속에서 적절한 실험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사회의 모델들은 여전히 실험을 거쳐야 할 것임.

○ ‘평등사회’의 운영원리

① 공공적 소유가 지배적인 사회

② 자원배분이 사회적으로 조절되는 사회

③ 민주적인 참여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

○ ‘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이행전략

① 공공적 소유 지향

② 시장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조절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해방은 반신자유주의로 교체되고 이마저도 슬그머니 사라진 후 노동운동은 자신의 이념 깃발을 상실한 상태다.
노동해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구조를 진보적으로 개편할 사회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은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이라는 '양날개론'을 긴 시간을 들여 합의하고 추진했다. 양날개 전략은 단순한 조직노선이 아니다. 이는 사회대개혁이라는 명확한 전략 목표를 향한 거대한 기획의 다른 이름이다. 산별노조를 통해 계급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진보정당을 통해 노동자를 정치적 계급으로 각성시켜 이 힘으로 진보적 사회대개혁투쟁을 펼치는 기획이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외적 성장이 사업장을 뛰어넘는 노동자의 연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보정당이 이른 분화로 성장세가 꺾이면서 양날개는 중단되지 않았으나 전진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이다. 그러면서 사회대개혁이라는 전략목표를 상실했다.

노동계급 만들기

우리 운동이 압축적 성장을 걸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체로서의 노동계급 형성이 노동운동의 첫 번째 과제이다. 노동자가 내부 분열을 딛고 연대를 통해 노동계급으로 각성하여 변혁의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투쟁, 사회운동의 연대, 진보정당의 정치활동이 분리된 일상 사업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성장과 각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획이어야 한다. 이러한 변증법이 바로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활동가의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백이야말로 노동계급 형성의 과제가 왜 지금까지 밀린 숙제로 남아있는지를 설명한다.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조운동은 반자본주의 운동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이념의 복원'과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체제를 사회연대국가로 대체하는 급진적 실천을 뒷받침할 '전략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념의 복원과 전략의 확보라는 기반 위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후퇴를 막고 운동의 재급진화를 실현한 주체인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사회운동정당과 사회운동노동조합" 건설**을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다.

이념과 전략의 복원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을 복원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토론과 학습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구난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 ▲우리 운동은 자본주의의 개량이 아닌 극복을 추구하며 이것은 근본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하되 대중적이고 급진적인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길을 추구한다. ▲여성주의·생태주의·국제주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다양성이 운동의 중심가치가 되도록 한다. 21세기 민주노조운동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최소강령으로 공유하며 다시 노동해방의 전망을 세워야 한다. 해방의 전망이 없는 운동은 사업장 권력을 둘러싼 다툼으로 변질한다. 선거가 아니라 현장을 선도하는 것이 노동운동가의 길이다.

이념으로 무장한 노동운동이 지향할 전략은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시장화된 국가를 사회연대국가로 대체하는 급진적 개혁투쟁이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시장국가를 해체할 수는 없다. 사회공공성의 확대를 중심으로 일상 개혁투쟁과 사회대개혁을 연결하며 꾸준하게 전진하는 것만이 이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혁신을 고민하는 진영은 다음의 3가지 목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1)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노동조합

우리는 투쟁하는 산별노조 건설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장투쟁의 단순한 총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투쟁의 양적 확대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투쟁하는 산별노조란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어 노동자 내부의 균열(비정규직, 여성, 청년, 이주노동)을 극복하고 사회연대임금처럼 사회공공성의 확장을 위해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조합**이다.

투쟁하는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노동조합 노선을 주목한다. 노동운동에 있어 지역이란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지역이라는 울타리를 매개로 정의되는 노동자의 삶을 의미한다. 공장과 집,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를 무대로 벌어지는 노동자의 일상이 모두 계급투쟁의 순간이 되도록, 노동조합과 협동조합과 진보정당·사회단체가 씨줄과 날줄로 연결되어 다양한 시민의 평범한 일상이 바로 투쟁이 되는 것이 지역운동이다. 노동조합이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조합원이 학교의 문제, 병원의 문제, 공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형식적인 연대가 아니라 이러한 투쟁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⑵ 지속가능한 노동운동

청년 조직화, 후속세대의 양성, 신규 간부·활동가의 발굴 모두 노동운동이 늙지 않기 위해, 사라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공식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것도 필요하고 정파조직이 모두 손 놓고 있는 활동가 재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서로 질타하고 또 뛰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단지 사람의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이 장기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변화를 뒤따라가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산업의 변화에 대해 계급적 대안을 가지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후속세대의 양성은 모집이 아니라 노동운동이 청년의 현실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현실을 타개할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렸다.

87년 세대는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청년들도 인간다운 삶을 원하지만 그 전에 자본주의 질서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에 노동조합이 유용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올바른 길임을 노동운동은 증명해야 한다. 또한, 다양성과 토론에 바탕을 둔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활동가의 몫이다. **우리 다음 세대의 노동운동가가 최소한 맨몸으로 자본주의에 맞서지는 않을 정도의 자산을 남겨주자.**

⑶ 노동계급의 정치적 성장

이미 말했듯이 여전히 주체로서의 노동계급 형성은 우리 운동의 숙제다. 노동자가 내부 분열을 딛고 연대를 통해 노동계급으로 각성하여 변혁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투쟁, 사회운동의 연대, 진보정당의 정치활동이 분리된 일상사업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성장과 각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획이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계급의 정치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공장과 지역이라면 그 매개가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존의 운동은 조합원이 당원이 되면 정치적 성장을 달성했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노동조합이 뒷걸음치는 것은 조합원이 노조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계급에 대한 자각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선거나 하물며 파업조차도 기성 사회질서를 뛰어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정치와 시장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노동조합의 토론과 민주주의 수준이 한국사회 일반수준보다 결코 높다고 장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모든 투쟁은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일반적 정치의식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조합원의 동지적 관계가 시민적 수준의 연대를 뛰어넘는 계기를

만들어야 노동계급의 덩치를 키울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은 정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할 것이 우리 내부의 힘이 야금야금 유실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 참호를 파고 들어가야 한다. 지방선거준비가 지역활동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선진조합원의 일상적 삶이 공장 밖으로 나가서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물망(지구당-소비조합-지역언론-문화소비단체)을 짜는 데 현장의 힘을 모아야 한다.

질문지(찢어서 사용하십시오)

질문지(찢어서 사용하십시오)

질문지(찢어서 사용하십시오)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9길 14-1 거산빌딩 3층 [우 03984]
· 전화 : 02)778-4001~2
· 팩스 : 02)778-4006
· 이메일 : pssp4001@gmail.com
· 홈페이지 : www.pssp.org
· 후원계좌 : 하나은행 771-910262-85707 (정영섭)